



The Midterm Election Playbook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응 전략과 국내 섹터 영향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10.26

하나증권

The Midterm Election Playbook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응 전략과 국내 섹터 영향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ntents

The Midterm Election Playbook I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응 전략과 국내 섹터 영향

- | | |
|-----------|--------------------------|
| 1. 전략 | 9. 화장품 |
| 2. 2차전지 | 10. 유통 |
| 3. 에너지/화학 | 11. 엔터/레저 |
| 4. 반도체 | 12. 통신서비스/통신장비 |
| 5. 자동차 | 13. 미래산업: 우주&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
| 6. 전력기기 | 14. 미래산업: 반도체 후공정 |
| 7. 철강금속 | 15. 미래산업: 로봇 |
| 8. 운송 | 16. 기타 업종 |

[요약]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응 전략과 국내 섹터 영향

- 11/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 선출 예정이다. 현재 예측(10/19일, Kalshi 기준)은 민주당 승리 확률을 하원 90~91%, 상원 62~65%로 반영하고 있어 기존 집권당인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다.
- 1980년 이후 11번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이 승리했던 경우 단 2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정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영향은 의회 필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 재정지출, 예산은 의회의 결정권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집권당 패배 시 제약이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관세, 통상, 외교는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2/3) 의석 수에는 민주당도 미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EV 세액공제 부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의회 조사/소환, 판사/행정부 인사 인준 지연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2027 회계연도 예산, 국방수권법,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섣다른 리스크가 연말~연초에 부각될 위험은 있다.
- 1980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단기(11월~1월) 주식시장은 집권당의 승리와 패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기반으로 S&P500지수와 코스피가 동반 상승했다
-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는 S&P500과 코스피 주가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S&P500지수의 경우 집권당 승리 시 다음 년도 평균 주가 수익률 22%, 패배 시에도 15% 상승했다. 코스피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집권당 패배 시에도 11%(승리 시 51% 상승, 다만 케이스가 2번에 불과) 상승했다.
-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식시장과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집권당 승리 시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11bp 상승했지만, 집권당 패배 시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7bp 하락했다. 확률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 최근 두 번의 중간선거(2018년과 2022년)에서 기존 집권당이 패배를 했다. 중간선거 다음 년도의 S&P500지수와 코스피의 변화는 중간선거 년도에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이 다음 년도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인 공화당의 의회 장악력이 유지된다면, IT하드웨어(반도체 소.부.장)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주가 관심 대상이 된다. 반면 민주당으로 의회 장악력이 이전된다면,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주요 섹터별 영향

	공화당	민주당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주도권 유지 시 감세와 재정지출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이 강화 기존 정책 수혜 기업의 이익과 성장 기대를 지지할 전망 다만 재정 확대 기대와 장기금리 상승이 동반될 경우 밸류에이션 회복 제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견제 강화로 감세와 재정 확대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 금리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 재평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관세, 통상 정책의 전면 전환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예산 협상 교착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위험 요인
2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하원 다수당 유지 시, 친환경 정책에 대한 현재 관심 및 기조 유지될 것 특히 연비 규제 완화로 전기차 수요 성장 동력 부진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친환경정책에 우호적이었다는 점과, 트럼프 Un-winding 수혜 고려할 때 민주당 승리는 배터리 섹터에 긍정적 다만, 애초에 친환경 정책은 낮은 물가와 패권 전쟁 격화 이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 물가, 불법 이민자 등 실존적 문제 부각되며 금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민주당조차 친환경 이슈를 의제화하지 않는 상황 결과적으로 민주당 승리를 가정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회복 난망, 에너지 부족에 따른 ESS 수혜 집중 전망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측면-반도체 관세 확대 시 IT 완제품 가격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스마트폰·PC 등 범용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존재 공급 측면-관세를 활용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압박 지속으로 국내 업체의 현지 CAPEX 및 생산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측면-관세 확대에 대한 의회 견제 강화 시 IT 제품 가격 상승 압력 및 글로벌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 완화 기대 공급측면-CHIPS Act 기반 제조시설 지원 및 R&D 투자 확대 논의로 미국 내 투자 가시성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 기대
반도체 후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 인허가 신속화와 미국 제조기반 확대 기조 유지 AI 서버·HBM 및 첨단패키징 종설의 투자 여건 지원. 전력 확보와 비용 부담은 공통 제약 미국 내 패키징·테스트 생산거점 확충 지속, 국내 소부장에는 공급망 진입과 실제 장비 발주가 확인되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용수·공시 관련 규제 논의는 실제 입법과 고객사 주문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하방 변수 신규 데이터센터 지연 시 GPU·HBM 주문과 후공정 종설 일정에 부담. 수주·매출 인식 시점에 간접 영향 미국 내 제조기반 확대 방향은 유지될 전망. CHIPS 집행과 공동 R&D에 대한 감독 강화는 지원 방식과 집행 조건의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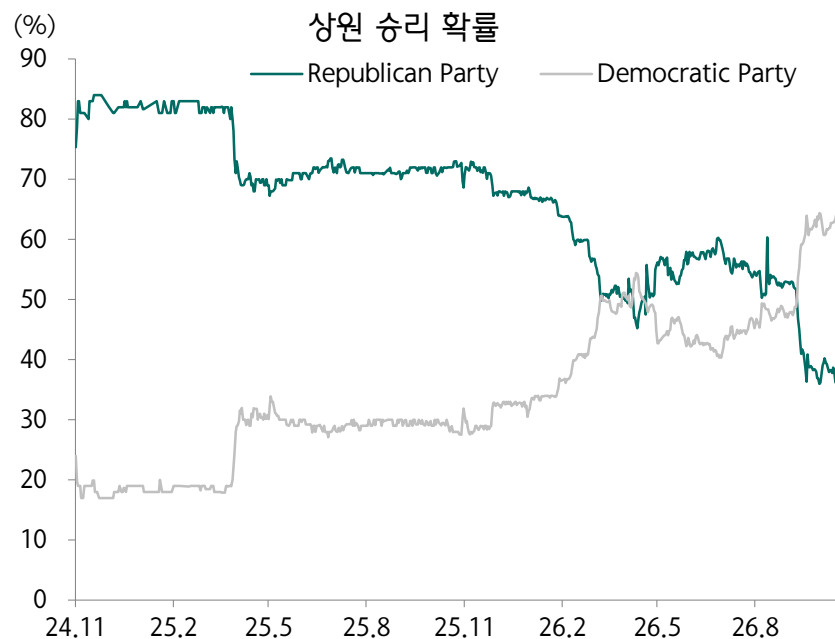
[요약] 주요 섹터별 영향

	공화당	민주당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원 다수당 유지 시 환경 규제 완화(온실가스 기준 폐지, CAFE 벌금 축소) 기조 지속과 추가 감세 및 규제 완화 입법 여지 관세 체제 장기화로 완성차/부품의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압박 강화. 301조 과잉생산 조사 등 추가 관세 리스크 잔존 중국산 완성차/부품 및 커넥티드카 규제는 초당적 사안으로 해당 기조 유지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관세 및 규제 정책은 행정부가 주도, 민주당의 하원 탈환·양원 승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듯(관세 15% 유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2025년 9월 종료)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2026년 2월 폐지)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청문회/조사 등 견제는 강화 중국산 완성차/부품 및 커넥티드카 규제는 초당적 사안으로 해당 기조 유지될 것
철강 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의 기존 정책 추진력 강화, 다만 철강금속 통상 관련해서 추가 규제보다는 기존 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 자국내 철강 및 금속제련 업체 건설 지속적으로 독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향 수출에 부정적 데이터센터 및 화석연료 투자 지속되며 국내 봉형강 및 에너지용 강관의 미국향 수출 기존 물량 유지 트럼프의 추가 재정부양으로 달러-원 환율 상승하며 국내 철강사들 원가 부담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승리 시에도 철강금속 관련 관세 및 통상은 기존 정책 유지 가능성 높음 철강 및 일부 금속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 의회의 권력구도가 바뀌더라도 큰 틀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 (의회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대통령 권한 제한하거나 232조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권 재의결 절차 필요) 데이터센터 건설 주민 반대 반영 지역사회 영향 평가 강화로 일부 프로젝트 지연 가능 의회의 화석연료 투자 축소를 위한 견제 및 감독 강화로 일부 프로젝트 지연 국내 봉형강 및 에너지용 강관의 미국향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 가능 의회의 추가 재정부양 견제로 원/달러 환율 하락하며 국내 철강사들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취임 이후 1) 상호관세 및 대중관세 강화, 2) 중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 3) 이란 전쟁 등 해운 불확실성이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IMO의 Net Zero Framework 채택 연기를 주도하였고, 이는 폐선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해운 시장 공급 증가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승리를 가정해도 관세 철폐는 어려우나, 향후 신규 관세 추진을 제약한다면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안정화되면서 병목 감소, 운임 하향안정화로 이어질 것 민주당 집권 시 해운에 대한 환경 규제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 있음. 이로 인한 폐선이 증가한다면 해운업에게는 긍정적
전력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연료 지원 정책 지속. 가스발전 중심으로 북미 전력수요 증가 대응 예상 데이터센터 관련 빅테크 투자 지속 시 중장기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 장기 전력수요 증가 전망 하에 유틸리티 업체 신규 인프라 확충 수요 우상향 지속 2028년 세액공제 일몰로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시 전력망 투자 적정 수준으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강화. 평균 출력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인프라 확충 필요 기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관련 송전 변압기 수요 재차 강화 가능 데이터센터 반대 정책 강화 시 BTM(Behind-The-Meter), 배전 제품 수요 단기 정체 장기 전력수요 증가 전망 하향 시 유틸리티 업체의 전력망 확충 수요 일부 감소 가능

중간선거 -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 우세로 전환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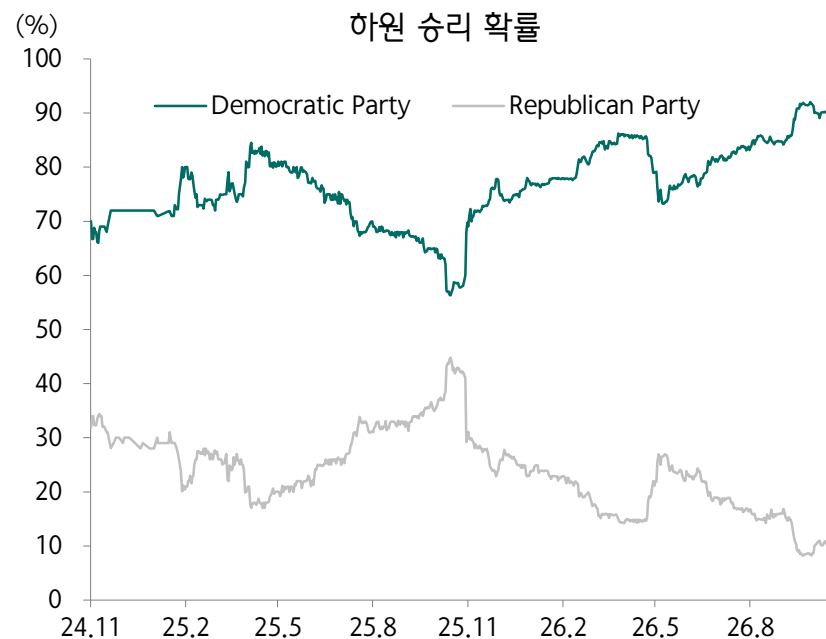
- 11/3 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플로리다·오하이오 보궐선거 포함) 선출
- Kalshi 기준, 민주당 승리 확률은 하원 90%, 상원 63% 내외로, 3월 상원에서 민주당이 처음 역전한 뒤 우위가 이어지는 중
- 공화당 단일 정부가 끝나고 블루웨이브(양원 민주당)의 기본 시나리오로 반영 중이며, 남은 변수는 상원 접전 주(州)의 결과 주목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상원 승리 확률



자료: Kalshi, 하나증권

2026년 미국 중간선거, 하원 승리 확률



자료: Kalshi,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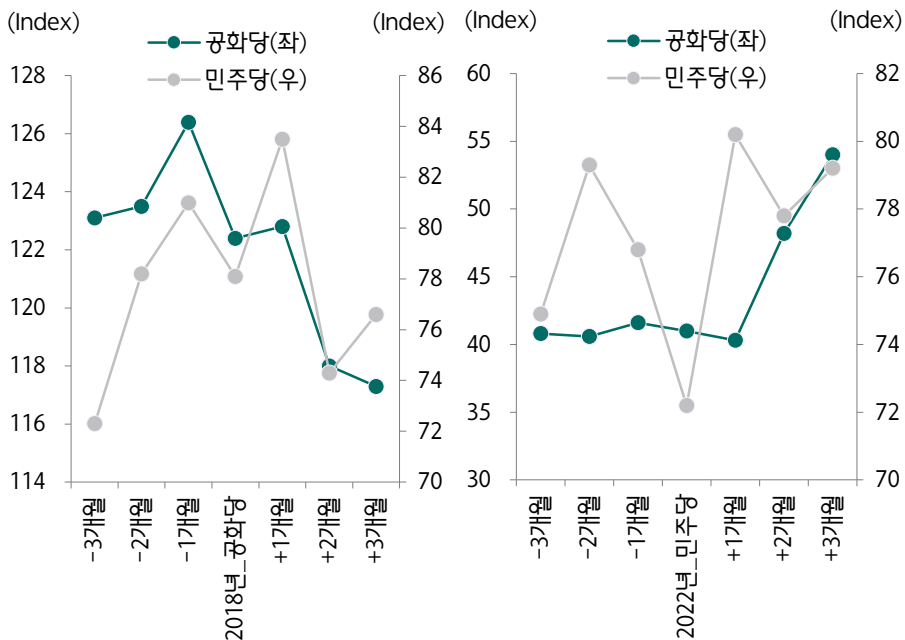
정책 영역별 의회 의존도: 입법은 막히고, 행정부 권한은 유지

의회 동의 필요 영역 민주당 하원 시 제약 강화			대통령·행정부 권한 영역 의회 구성 바뀌어도 정책 유지		
정책 영역	중간선거 이후 전망	변화 가능성	정책 영역	중간선거 이후 전망	변화 가능성
감세	추가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어려움. 2017-2025년 같은 단일정부형 감세 입법 재현 제한	높음	관세	IEEPA 관세는 2/20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122조(150일)·301조로 대체. 의회 입법 없이 유지	낮음
재정지출	분점 정부 하 실질 연방지출 증가율은 단일정부보다 낮았음. 추가 재정 확장 제약	높음	통상협상	USTR 주도 양자 협상 지속. 301조 관세는 한국·일본 12.5% 상한 등 국가별 차등	낮음
복지제도	Medicaid·ACA 추가 삭감 저지. 민주당은 삭감 되돌리기와 보조금 복원 시도	높음	이란 등 외교	대통령 고유 권한 영역. 의회는 청문회·조사 등 견제 수준에 그칠 전망	낮음
연방 예산	2027 회계연도 예산·국방수권법 협상 진통. 셋다운 리스크 확대	높음	행정명령	2기 첫 18개월 288건(1기 4년 220건). 의회 견제는 조사·소환 중심	낮음
부채한도	민주당 하원의 협상 레버리지 확대. 협상 시한 전후 시장 변동성 요인	높음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민감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소비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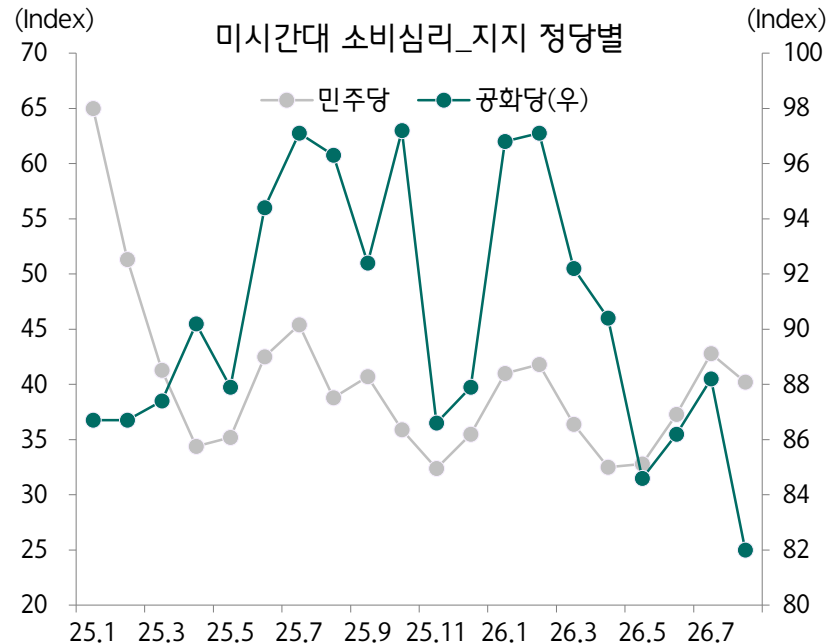
- 공화당 행정부에선 공화당 지지층, 민주당 행정부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소비심리가 상대적 우위
- 2018년(집권당: 공화)과 2022년(집권당: 민주) 중간 선거에서 모두 집권당 하원 의석 축소. 공화당 지지층의 심리 변동이 더 큼
- 2026년 이후 공화당 지지층 소비심리 둔화 지속 → 물가·경기 평가 악화, 강경 정책 추진력 제약

과거 중간선거 전후 지지 정당별 소비심리 (2018년과 2022년)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하나증권

2026년 이후 공화당 지지자 소비심리 하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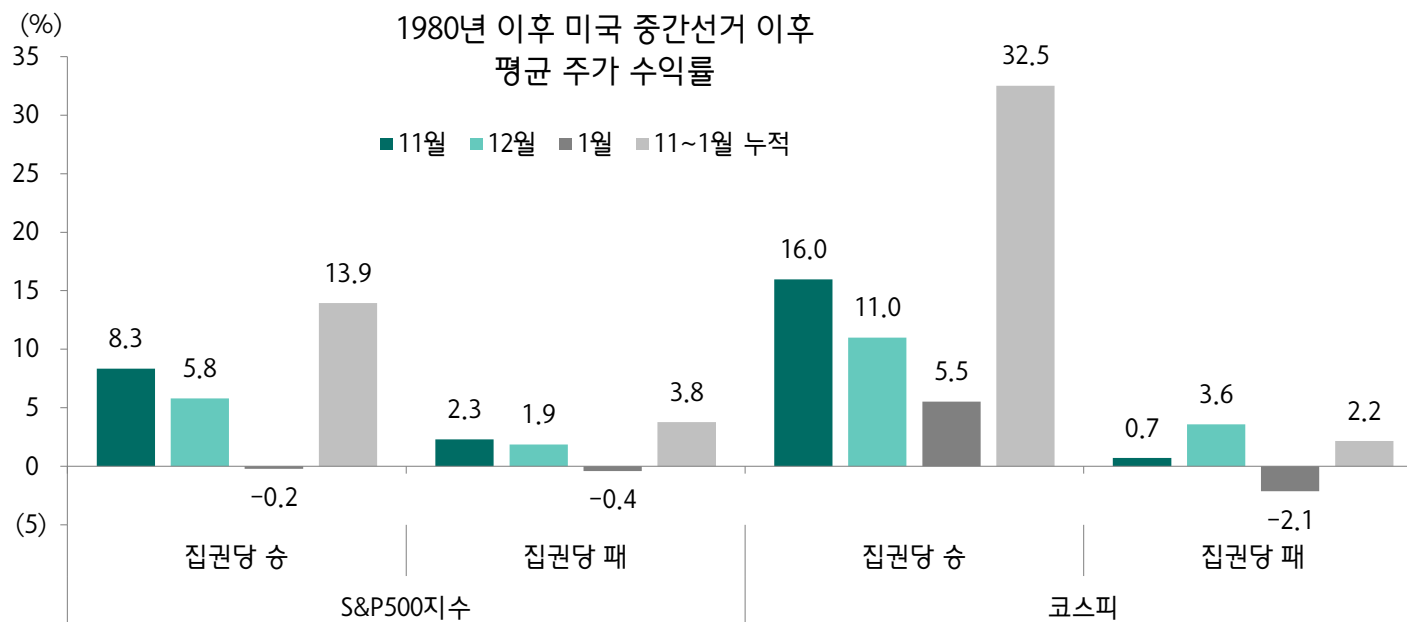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단기 증시 변화: 기존 집권당 승패는 미국보다 국내 영향이 큰 편

- 1980년 이후 11회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이 승리했던 경우는 2회에 불과
- 기존 집권당 패배 시 S&P500지수 11월 주가 수익률은 승리 시보다 낮지만, 11~1월 누적 주가 수익률은 승리 시와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코스피는 차이가 큼. 기존 집권당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대외정책 실행 및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결과

1980년 이후 중간선거 집권당 승패별 평균 S&P500지수와 코스피 주가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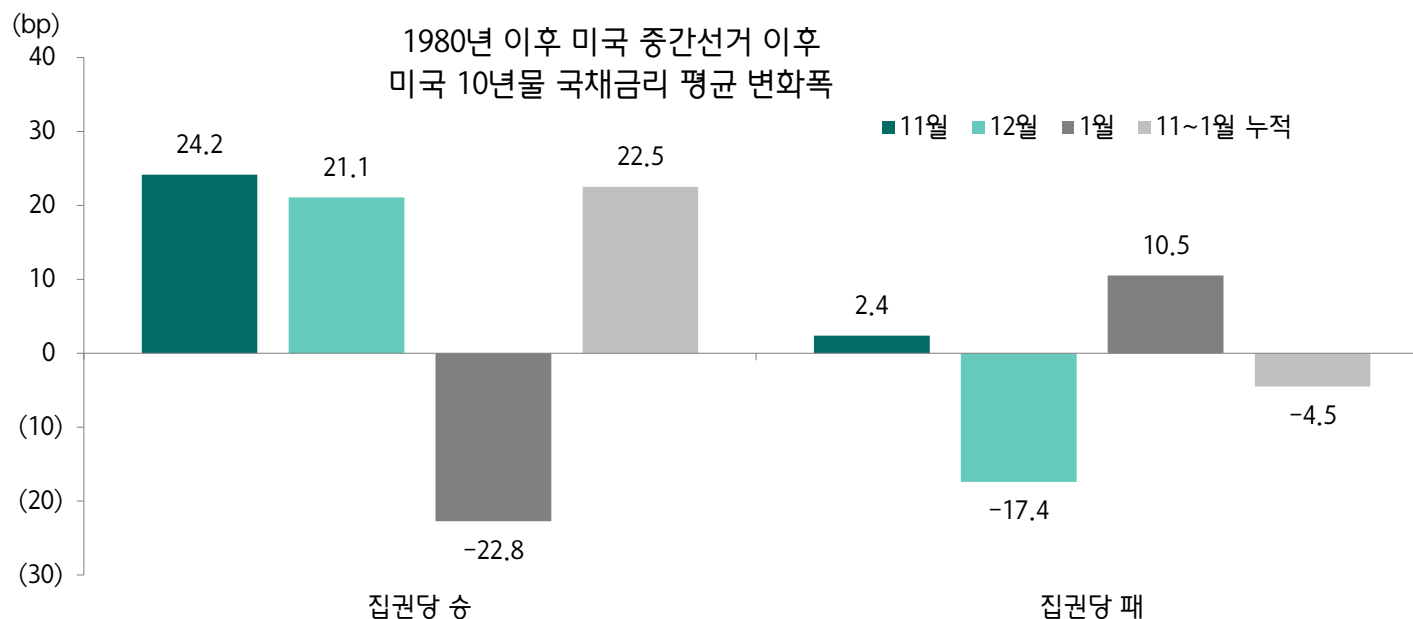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단기 금리 변화: 집권당 패배 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제한

-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 승리 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1~12월 45bp 급등(11~1월 누적 +22.5bp)
- 이는 정책 연속성과 재정 지출 확대 기대를 반영한 결과
- 패배 시 11~1월 누적 -4.5bp로 상승 제한. 의회 교착으로 재정 확장 기대가 약해진 영향
- 금번 중간선거에서 블루웨이브 시 장기금리 하락 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

1980년 이후 중간선거 집권당 승패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평균 변화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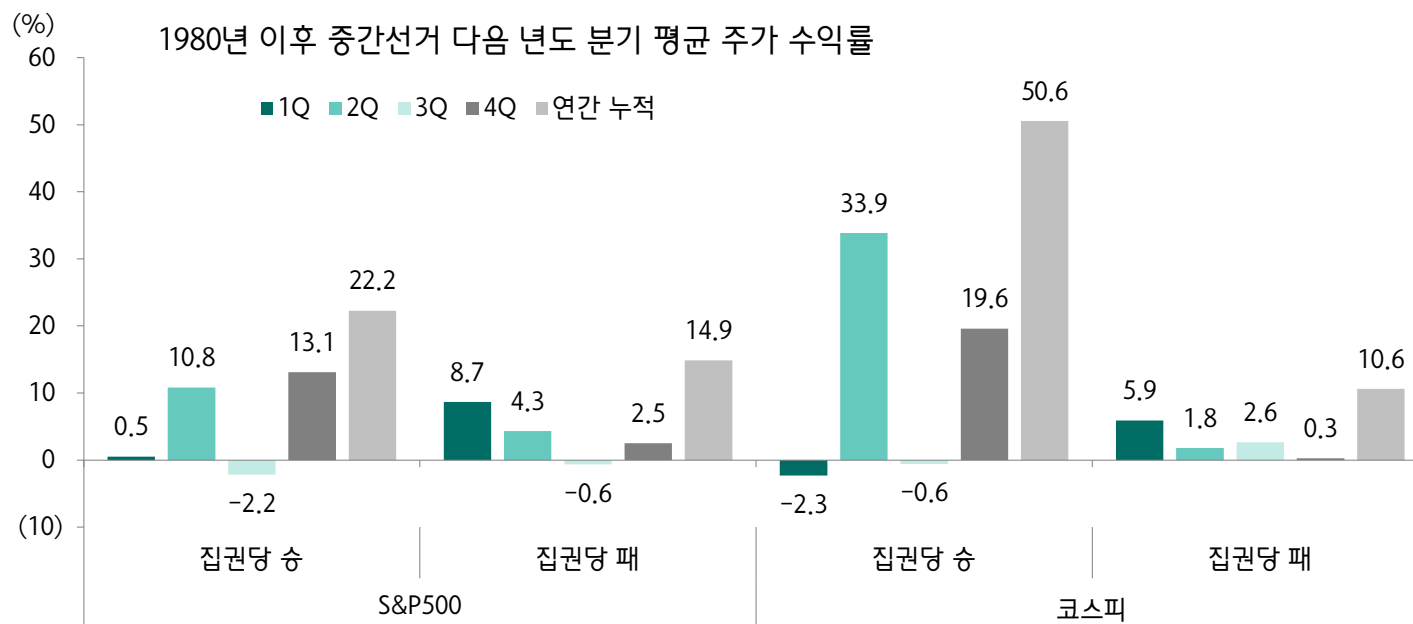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 증시: S&P500지수와 코스피 동반 주가 상승

-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는 S&P500과 코스피 주가 수익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
- S&P500지수의 경우 집권당 승리 시 다음 년도 평균 주가 수익률 22%, 패배 시에도 15% 상승
- 코스피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임. 집권당 패배 시에도 11% 상승

1980년 이후 중간선거 집권당 승패별 다음 년도 평균 S&P500지수와 코스피 주가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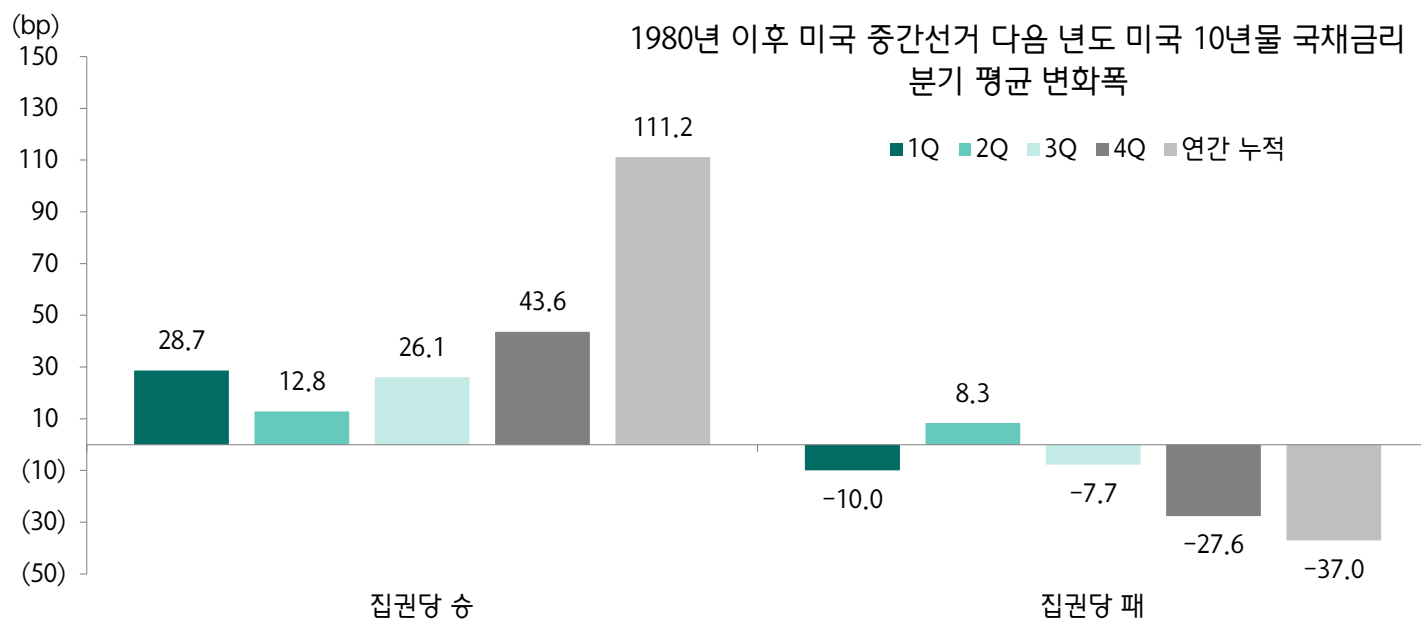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 금리: 집권당 승패에 따라 흐름이 달라짐

-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식시장과는 다른 흐름을 보임
- 집권당 승리 시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11bp 상승
- 집권당 패배 시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7bp 하락

1980년 이후 중간선거 집권당 승패별 다음 년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평균 변화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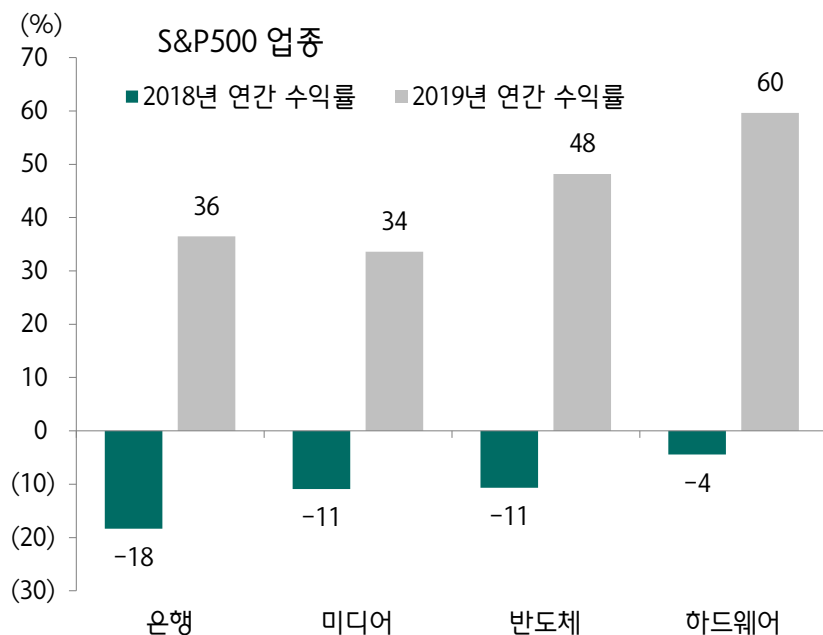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 주식시장, S&P500: 기존 주가 부진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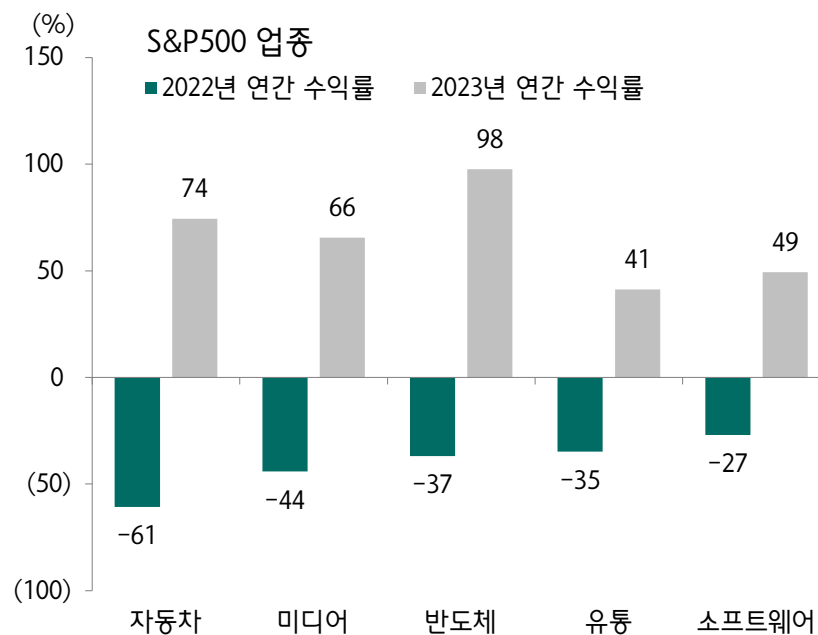
- 2018년과 2022년 모두 중간선거 년도에 하락한 S&P500 업종이 다음 년도 큰 폭의 상승률 기록
- 2018년 주가가 하락했던 반도체, 하드웨어, 미디어, 은행은 2019년 30~60% 상승
- 2022년 주가가 30~60% 급락한 반도체, 미디어, 자동차는 2023년 65~100% 반등
- 미국 중간선거 당해 년도 부진했던 업종, 다음 년도 관심 업종으로 변화. 2026년 주가 부진 업종은 자동차(-16% 하락)

S&P500지수: 2018년 하락 업종의 다음 년도(2019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S&P500지수: 2022년 하락 업종의 다음 년도(2023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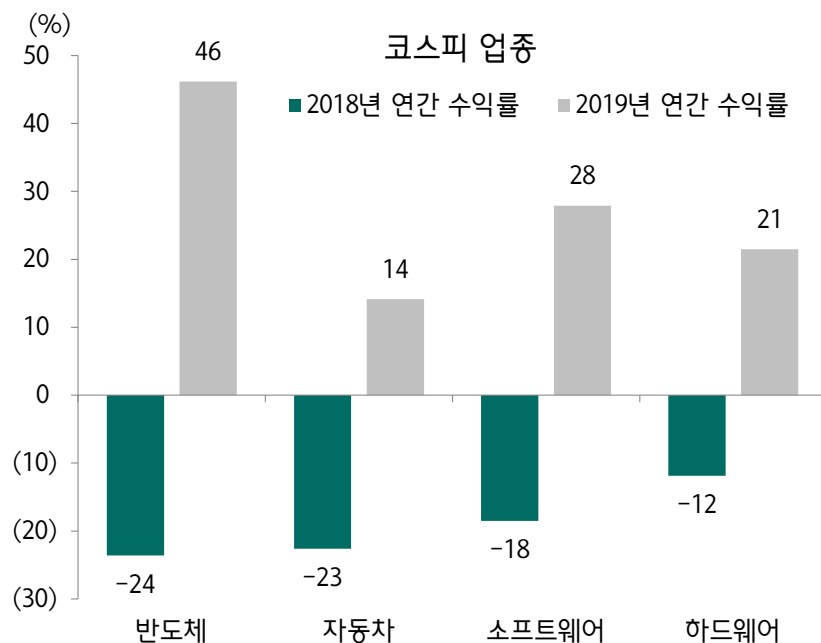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 다음 년도 주식시장, 코스피: 기존 주가 부진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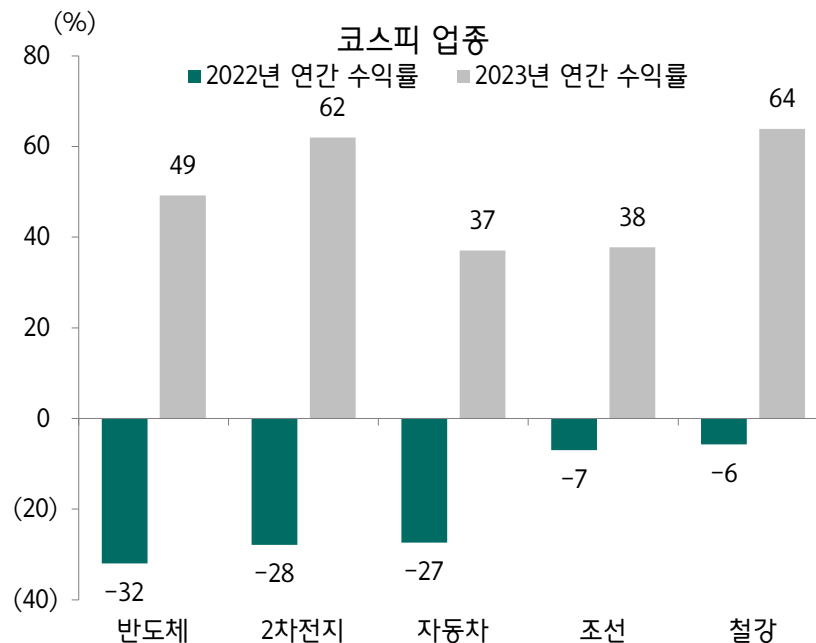
- 국내 증시도 중간선거 해 부진 업종이 이듬해 반등하는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남
- 2018년 -20% 이상 하락한 자동차와 반도체는 2019년 각각 14%와 46% 상승. 부진했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동반 상승
- 2022년 급락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는 2023년 40~60% 내외 반등. 당시 철강과 조선도 큰 폭 상승
- 미국 중간선거 당해 년도 부진했던 업종, 다음 년도 관심 업종으로 변화. 2026년 주가 부진 업종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코스피: 2018년 하락 업종의 다음 년도(2019년) 수익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하나증권

코스피: 2022년 하락 업종의 다음 년도(2023년) 수익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하나증권

과거 선거와 달리 2026 미국 의회 선거에서 친환경 정책은 관심 밖

-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친환경정책에 우호적이었다는 점과 트럼프 Un-winding 수혜 고려할 때 민주당 승리는 배터리 섹터에 긍정적
- 다만, 애초에 친환경 정책은 낮은 물가와 패권 전쟁 격화 이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
- 물가, 불법 이민자 등 실존적 문제 부각되며 금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민주당조차 친환경 이슈를 의제화하지 않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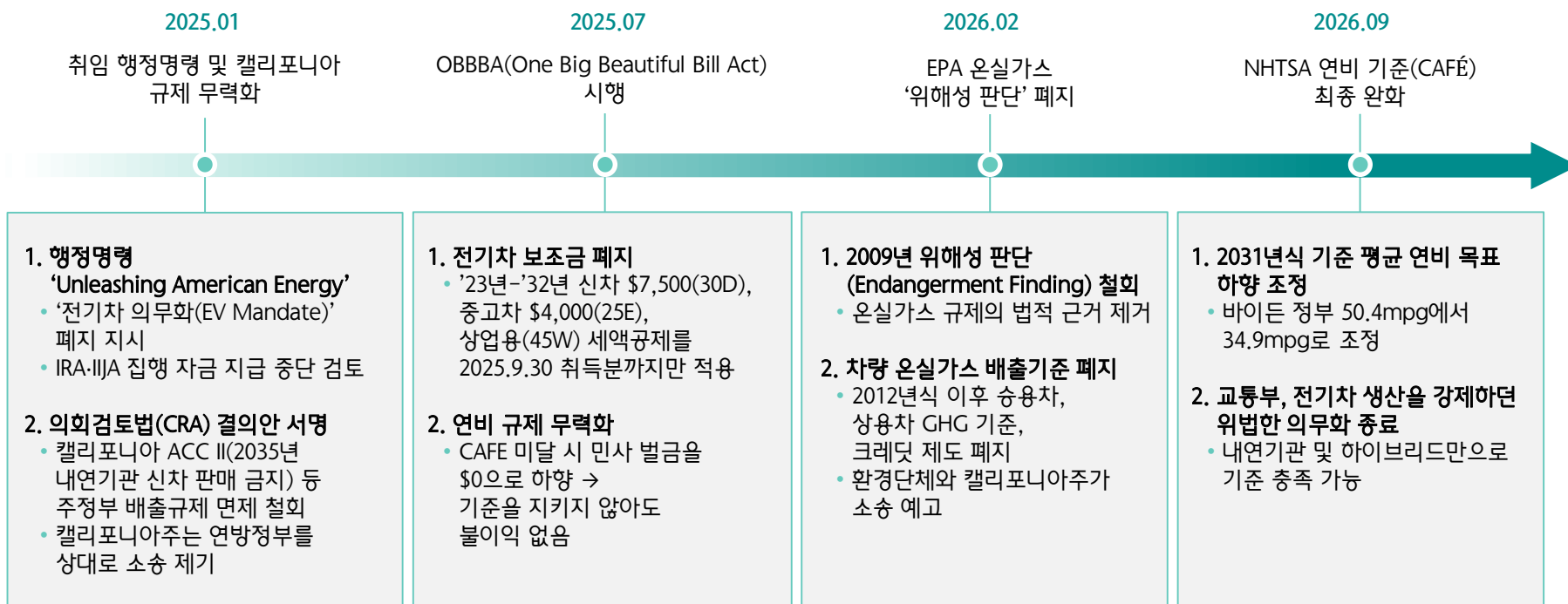
정책 영역	세부 내용	쟁점 구도
생활 물가 (Afford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휘발유 갤런당 \$4.28(전년 대비 +\$1.20), 경유 \$6.32(+\$2.70) • 유권자 절반이 물가를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선택 (Reuters/Ips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 파기” 공세, Affordability 어젠다 제시 • 공화당: 감세 연장을 최대 성과로 내세움
관세·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6대 3) • 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최대 15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논쟁이 생활물가 의제와 맞물림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세 연장 법안으로 Medicaid 등 보건 예산 약 \$1조 삭감 • ACA 보조금(수혜자 2,400만 명) 연장이 무산됐고, 작년 섯다운의 원인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보험료 상승과 Medicaid 삭감 공세 • 공화당: 재정 건전성 강조
이민·국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부 국경 체포 건수 바이든 정부 대비 95% 감소 • 공화당 단독으로 ICE·국경순찰대 예산 \$700억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 국경 통제 성과 강조, 민주당을 “국경 개방” 세력으로 공격 • 민주당 일부: ICE 폐지·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요구
트럼프 심판·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지지율 31%로 역대 최저 • 텍사스·캘리포니아(Prop 50)의 임기 중 선거구 재획정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부패 의혹 책임 추궁 공약
AI·데이터센터 (전기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이후 데이터센터를 언급한 선거 광고비 \$4,500만 이상 • 77%가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당 모두 세제혜택 축소와 요금 전가 방지를 주장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이란 공습과 그에 따른 유가 급등 	
친환경·기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당 모두 선거 쟁점으로 꺼내지 않음 	

자료: 언론보도, 하나증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 지속되며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 어려운 상황

- 2025년 7월 OBBBA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말 조기 종료되며 수요 측 성장 동력 소멸
- 2026년 EPA 온실가스 기준 폐지와 NHTSA 연비 기준(CAFÉ) 최종 완화
- 연비규제는 행정명령 사항이므로 의회 권력 교체와 무관

트럼프 2기 자동차 환경규제 및 보조금 변화 추이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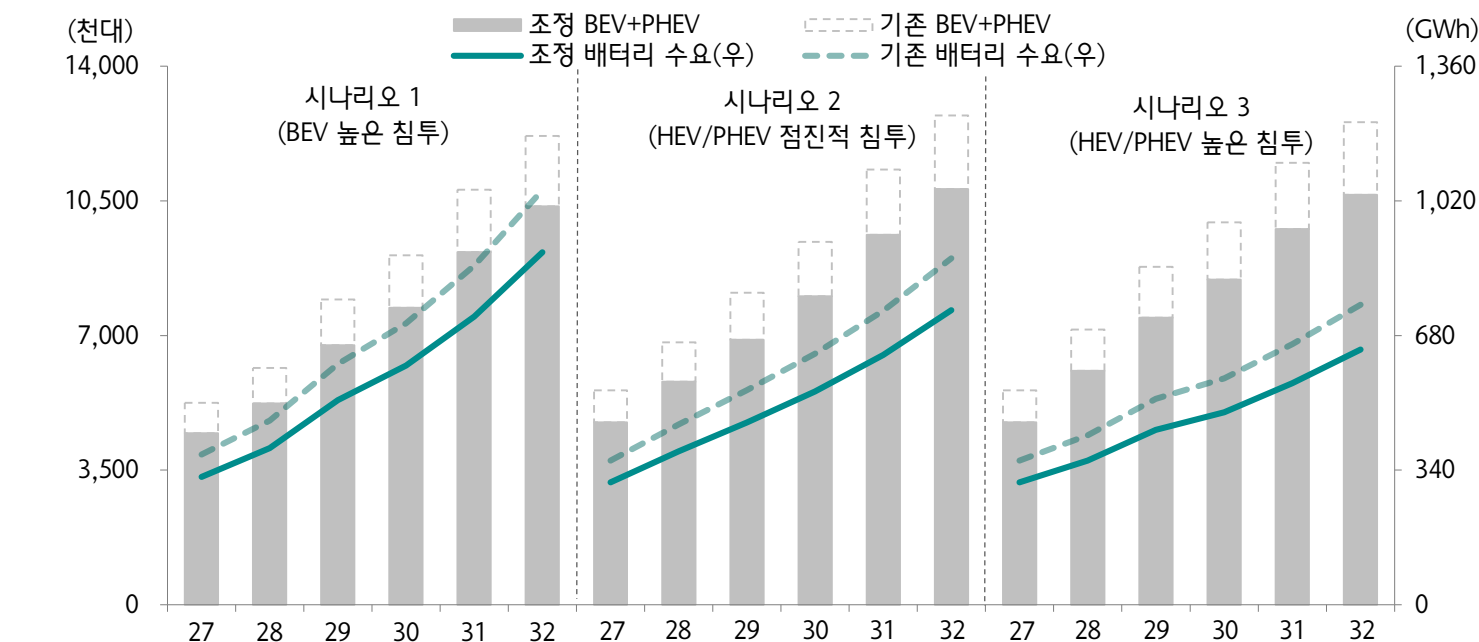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하나증권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에 따른 전기차 수요 성장 동력 약화 불가피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21.4km) 연비 기준을 2031년까지 갤런당 34.9마일(리터당 14.7km)로 낮추는 방안을 최종 확정
- 친환경차 규제 완화에 따른 전기차 수요 성장 동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여전히 북미 전기차 판매량 부진

트럼프 행정부의 EPA 배기가스 규제 완화 및 전기차 의무 정책 폐지로 전기차 침투 시나리오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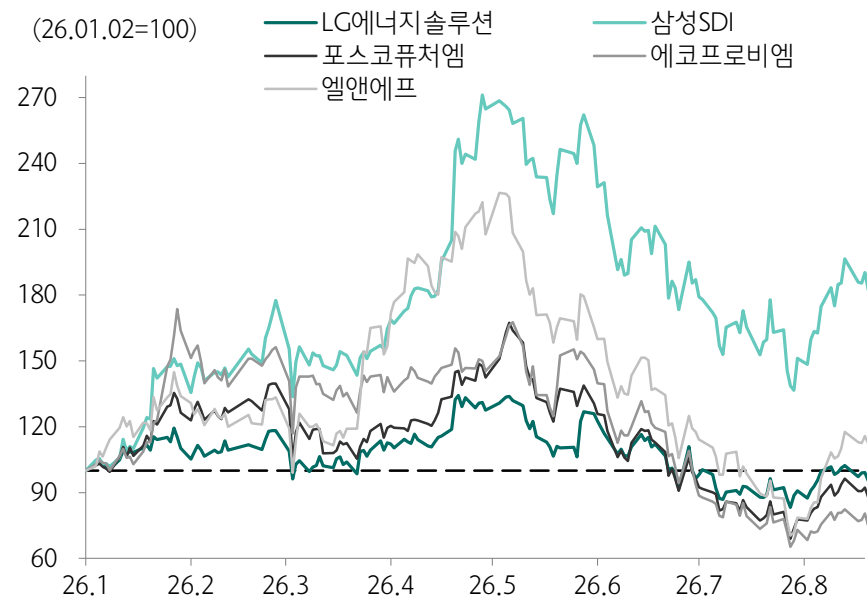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하나증권

민주당 승리 가정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회복 난망, 에너지 부족에 따른 ESS 수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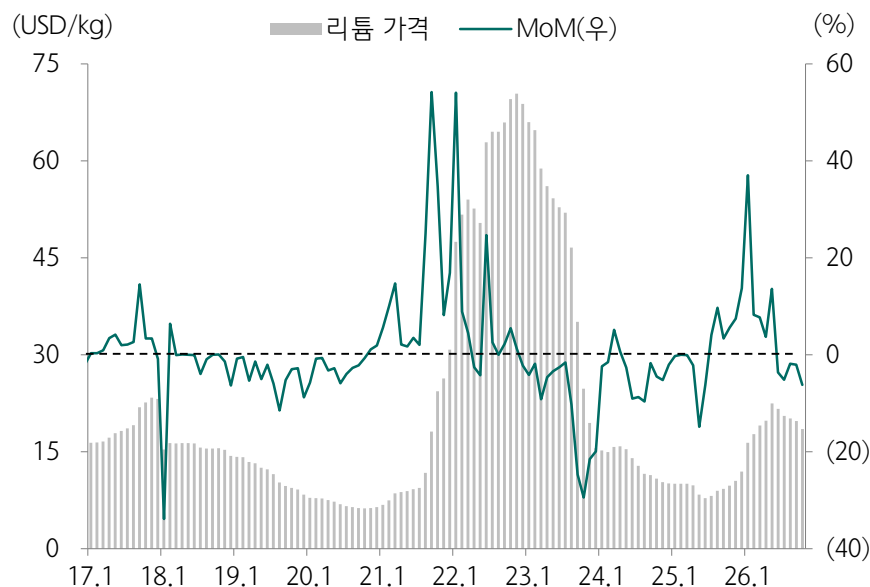
- 7월 말 실적 발표 이후 지속된 배터리 섹터의 주가 상승은 ESS 수주 및 미국 CAPA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
- 삼성SDI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및 GM 합작사 청산, LGES의 신규 수주 가이드라인 유지 등이 주가 상승폭 확대
- 여전히 부진한 EV 업황과 리튬 가격 하락으로 ESS 수혜가 명확한 대형주와 ESS 부품 및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선별 접근 권고
- 민주당 중간 선거 승리 가정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는 어려우나 에너지 부족 논리는 지속 강화되며 ESS 성장 가속화 전망

주요 전기차·2차전자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하나증권

탄산리튬 선물 가격 추이



IRA 세액공제 일몰 시점 연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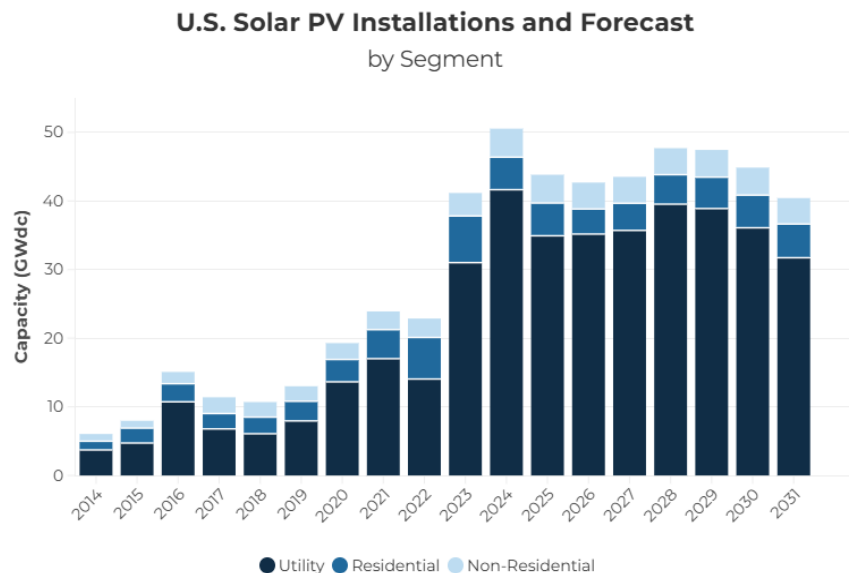
- 트럼프2.0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Drill, Baby, Drill)와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로 요약
- 실제, 트럼프 취임 이후 IRA 수정안인 OBBBA를 통해 ITC(48E)/PTC(45Y) 세액공제 일몰 시점 2032년 → 2028년으로 앞당겨
- 당시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에 강하게 반발. OBBBA의 하원 최종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12명 전원 반대
- 따라서, 향후 Blue Wave 시나리오 하에서는 ITC/PTC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복원될 가능성 존재

OBBBA 하원 최종 표결 결과(2025.07.03)

정당	찬성	반대	출석 기권	표결 불참
공화당	218	2	0	0
민주당	0	212	0	0
무소속	0	0	0	0
합계	218	214	0	0

자료: CLERK, 하나증권

미국 연간 태양광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202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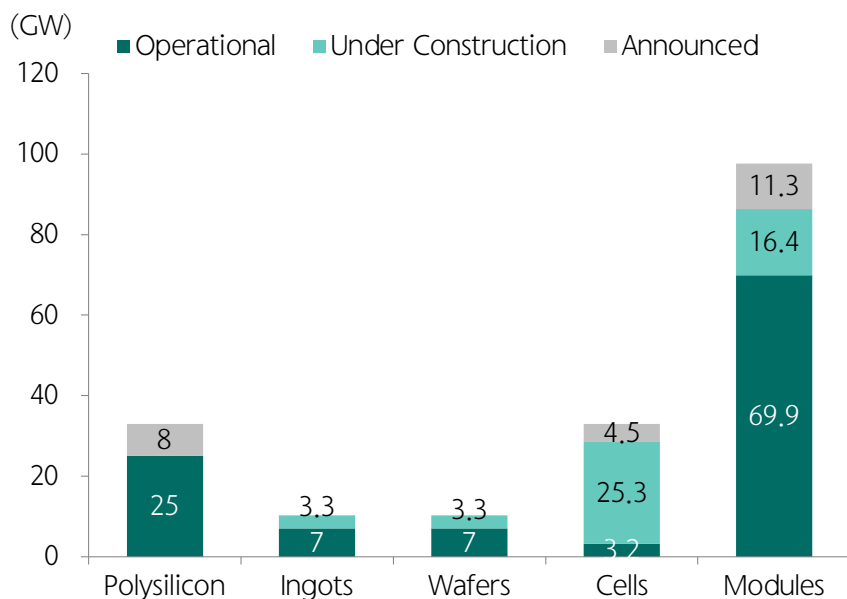


자료: SEIA, 하나증권

중국 공급망 배제 기조는 유지될 것

- 미국 태양광 산업은 그간 중국의 저가공세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Upstream 공급망이 붕괴
-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웨이퍼 공급망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불가피. 이는 AI/반도체 산업 및 국가 안보에 중장기적 위협
- 트럼프는 취임 후 i) OBBBA 내 PFE(FEOC) 규정 강화 ii) 폴리실리콘/파생제품 관련 Section 232 조치 등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 추진
-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와 첨단산업 보호는 초당적 의제. Blue Wave 시나리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전망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별 CAPA. Upstream 공급망이 부족



자료: SEIA, 하나증권

주: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용과 태양광용을 모두 합산한 Capa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대상 Section 232 포고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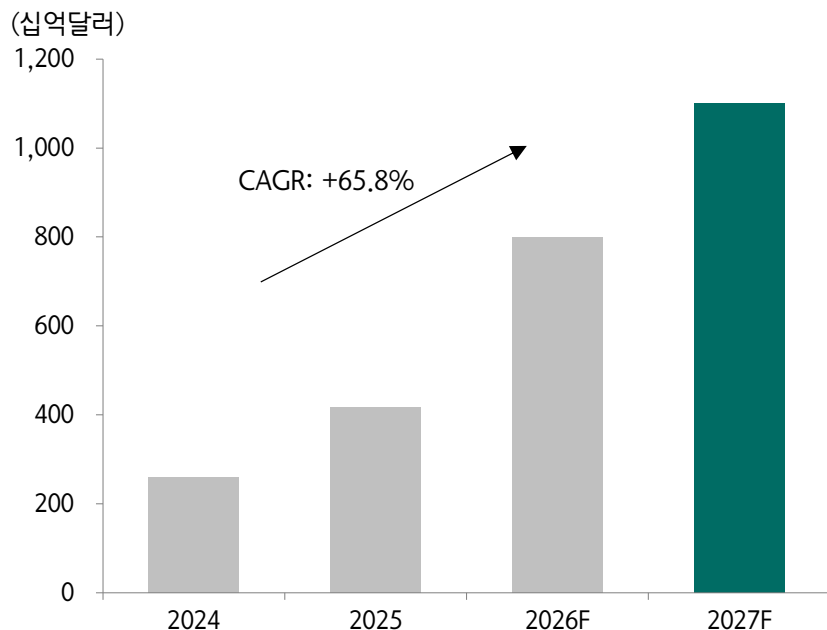
구분	최저수입가격(MIP)	15% 추가 관세
폴리실리콘	21\$/kg	부과 안함
잉곳/웨이퍼	100\$/kg	부과
셀	0.22\$/W	부과
모듈	0.38\$/W	부과

자료: 하나증권

관세정책 견제 및 반도체 투자 지원 지속 여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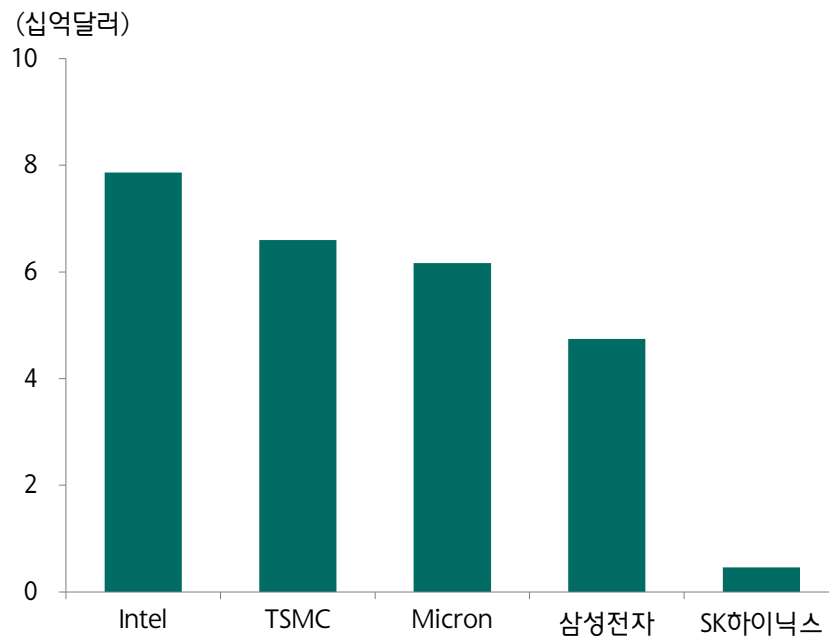
- 민주당 당선 시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 강화 시 IT 제품 가격 상승 압력 완화 및 글로벌 수요 불확실성 축소 기대
- CHIPS Act 지원정책의 연속성 및 후속 지원 논의에 따른 미국 현지 투자 가시성 제고 기대
- 다만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부담 및 세제 혜택 축소 논의는 SI 반도체 수요의 잠재적 부담
- 공화당 당선 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압박 존재. 리쇼어링 관세 정책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의 현지 CAPEX 및 생산비용 부담 확대 우려
- 다만 관세를 활용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유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빅테크 업체들의 CAPEX 금액 투자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hips Act 주요 기업별 직접 보조금 약정 규모



자료: SIA, CHIPS Program Office, 하나증권

주: 주요 확정 직접지원 약정액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 및 이후 계약 변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민주당 당선 시 반도체 밸류체인 별 영향 점검

- CHIPS Act: CHIPS Act의 정책 연속성 및 후속 지원 논의, 관세 정책 견제를 통한 국내 업체들의 불확실성 완화 기대
- 메모리: 관세 정책 견제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 완화 기대. 다만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강화 시 HBM·DRAM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
- 소부장: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 및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 논의에 따른 소부장 수주 환경 개선 기대
- 팹리스: 통상정책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 有,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부담 및 세제 혜택 축소 논의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 둔화 위험 상존

각 정당 당선 시 반도체 밸류체인 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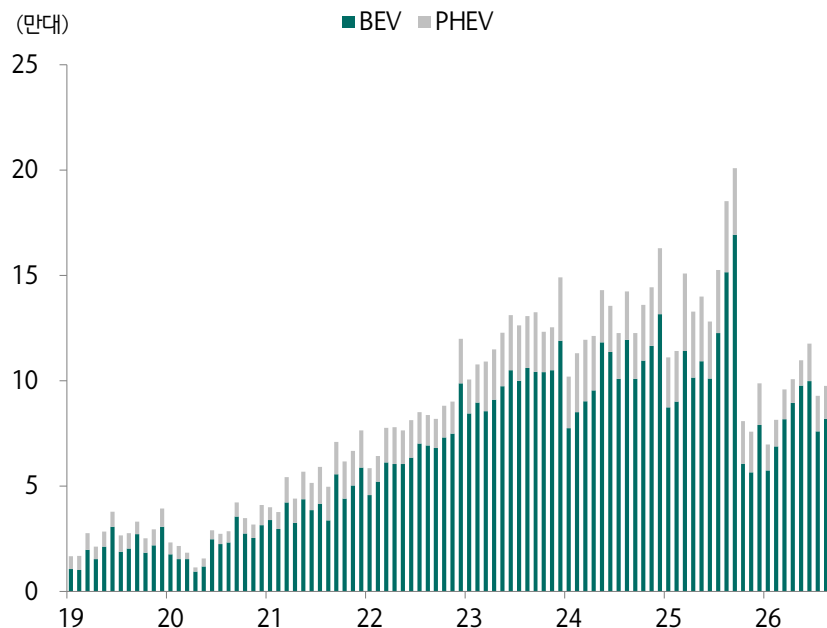
	공화당	민주당
CHIP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제조업 육성기조는 유지하되, 직접 보조금보다는 민간투자 및 세제 중심 지원 선호 • 대중국 견제 기조가 강해지며 공급망 재편 압박은 확대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CHIPS Act 기조 유지 및 후속 지원 확대 기대 • 반도체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가능성 • 친환경 및 노동 환경 관련 부대조건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 가능
국내 메모리/파운드리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규제 강화시 중국 생산거점 관련 불확실성 확대 • 반면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이 지속되며 현지 생산기지 보유 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확대 • 보조금 집행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경우 투자비 부담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기대가 높아 현지 투자 부담 완화 •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한국 업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다만 대중국 기술 규제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강화 시 HBM·DRAM 수요에 부담
소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신규 팹 투자 지속 시 장비·소부장 수요는 견조 • 다만 보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일부 발주 시점이 지연 • 중국향 규제 강화 시 대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PS Act 기반의 설비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장비·소부장 업종 수혜 • 첨단 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로 수주 여건 개선 가능 • 미국 투자 증가에 따라 현지 공급망 편입 기업의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음
팹리스/AI반도체/첨단패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정책으로 AI·첨단 반도체의 전략산업 가치 부각 •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국 기술기업 우대 가능성 • 다만 무역분쟁 심화 시 글로벌 수요 변동성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HPC, 첨단 패키징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가능 • 연구개발 투자 및 산업 육성 측면에서 우호적 환경 조성 가능 • 규제 강화 논의가 일부 대형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연결
대중국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견제 강도 상승 • 미국 중심 공급망 기업에게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 정책 예측 가능성은 공화당보다 높음

자료: 하나증권

행정부 주도의 자동차 정책 영향으로 친환경차 관련 제도 복원은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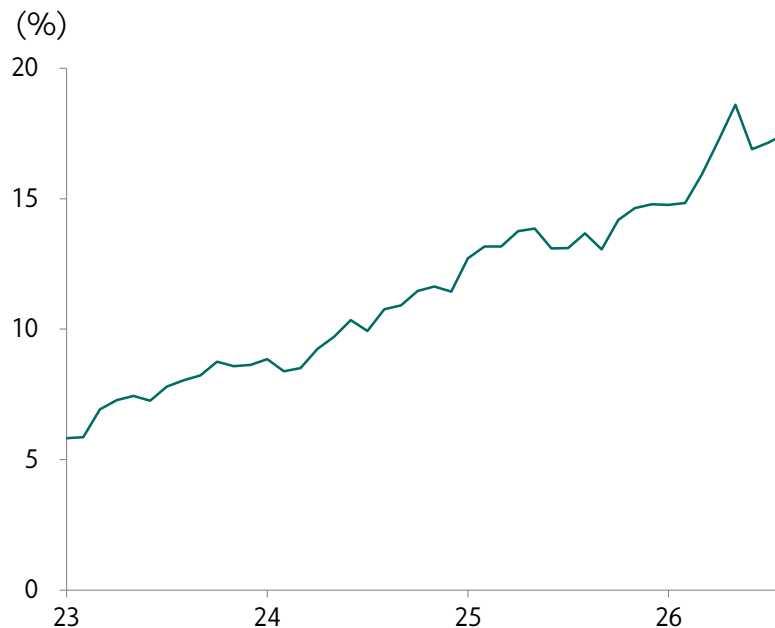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및 규제 정책은 행정부가 주도. 민주당이 양원 승리해도 직접 영향은 제한적
- 민주당의 의석 수 강화 시 친환경 정책 후퇴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 2019년 트럼프 1기 당시에 하원 감독위원회가 차량 연비/배출 기준 완화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청문회 개최 사례가 존재
- 다만, 대통령 거부권의 영향으로 EV 세액공제(2025년 9월 종료)와 온실가스 배출규제(2026년 2월 폐지) 정책 등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미국의 EV 침투율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미국 7.1% vs. 글로벌 22.8%). 수요의 HEV 이동 지속

미국 전기차(BEV+PHEV) 월별 판매대수 추이



자료: SNE, 하나증권

미국 HEV 침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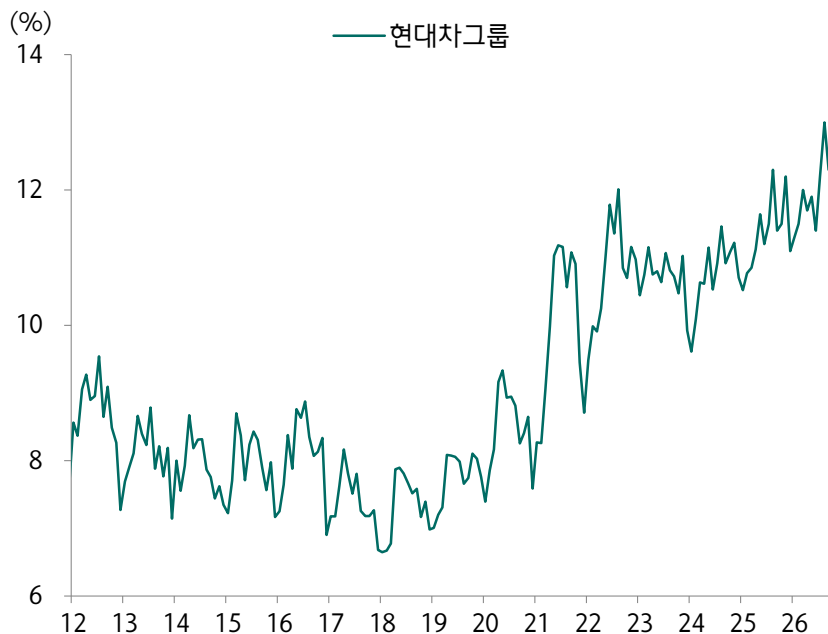


자료: Omdia, SNE, 하나증권

관세 역시 행정부의 영역, 원화 강세가 지속될 시 수출 비중이 큰 완성차 업체에는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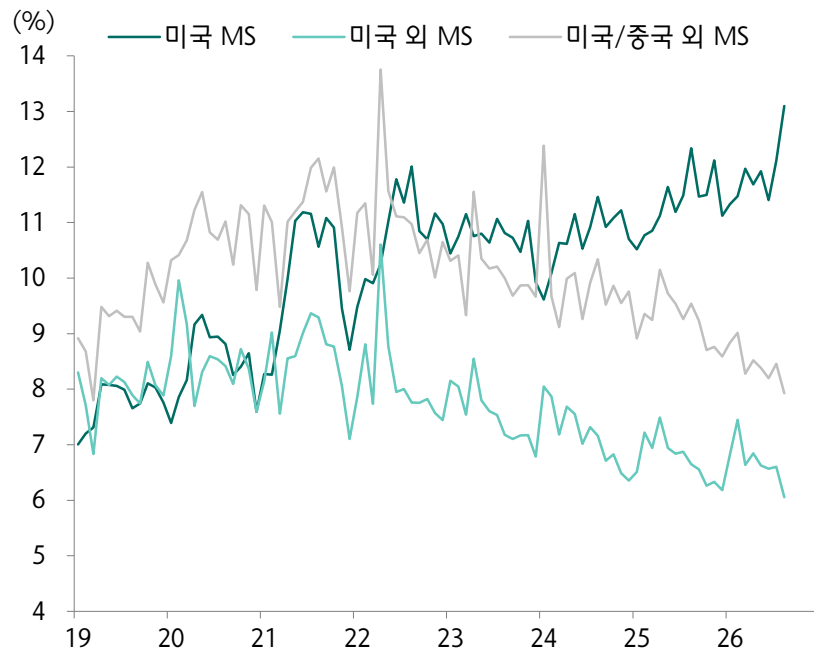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 15% 관세는 232조(행정부 권한) 근거해 유지. 오히려 301조 과잉생산 조사 등 행정부 단독 카드가 선거와 무관한 리스크
- 중국산 완성차/부품 및 커넥티드카 규제는 양당 공통 기조(초당적 커넥티드카 보안법, 7월 상원 상무위 통과)라 유지될 것
- 원화 강세 지속 시 수출 비중이 큰 완성차 업체에게는 부담. 달러-원 환율 10원 변동 시 한국 완성차들의 연간 영업이익 4천억~5천억 원 수준 변동. 완성차를 포함해 부품사들의 원가 절감 압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 글로벌 내 미국 의존도 심화 리스크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현대차, 기아, 하나증권

현대차/기아의 '미국 vs. 미국외 vs. 미국/중국외'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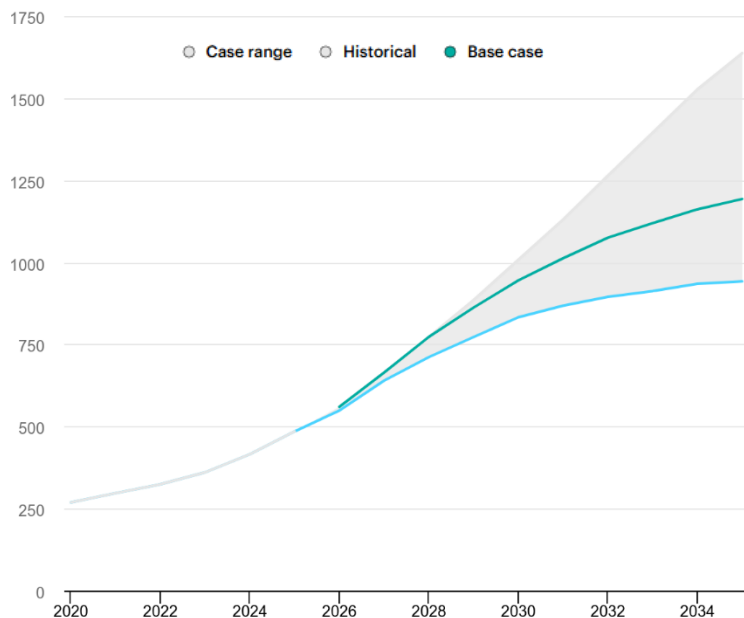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하나증권

빅테크 규제 여부 확인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시 일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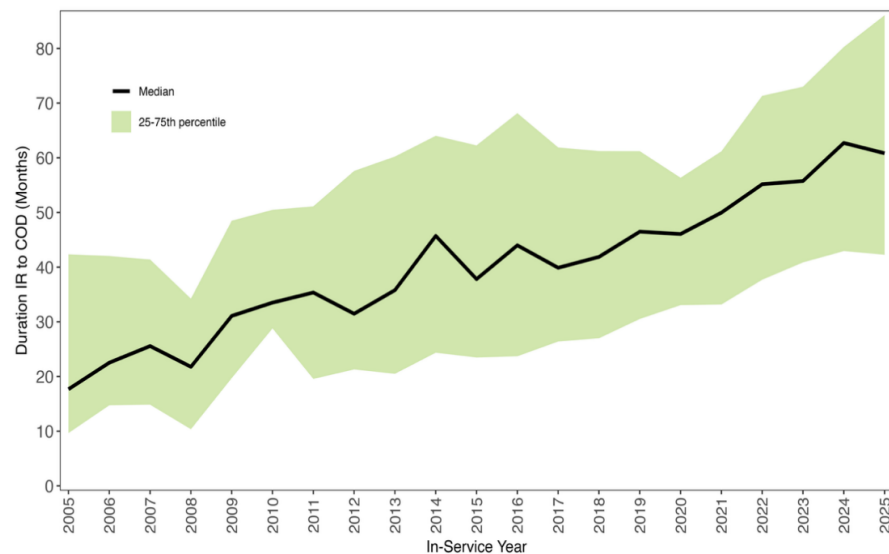
- 민주당 우세 시나리오에서 태양광, 풍력 세액공제 일몰 시점 연장 가능. 중장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대감 제고
- 전력공급 관점에서 전력기기 수요 증가 모멘텀. 재생에너지는 평균 출력이 낮기 때문에 같은 용량에서 더 많은 인프라 확충 필요
-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송전 인프라 투자와 노후 전력망 교체 증가는 장기적인 전력기기 수요 및 납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전력수요 관점에서 부정적 요소 존재. 데이터센터 반대 정책 강화 시 빅테크 투자 감소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속도 둔화 가능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전망 (2020년~2035년)



자료: IEA, 하나증권

전력망 연계 신청 후 상업운전 개시일까지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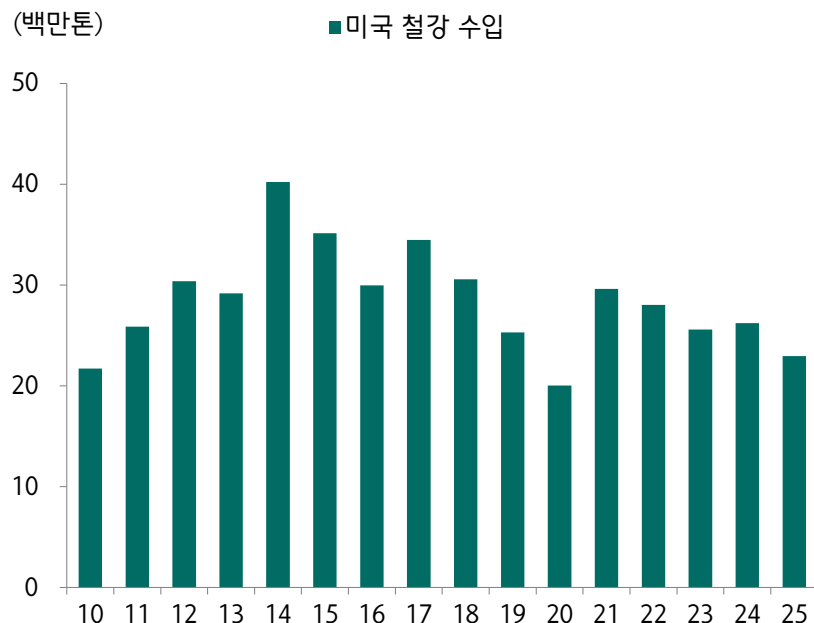


자료: LBNL, 하나증권

미국 의회 권력구도 변화 있더라도 철강금속 관세 정책 큰 틀 변화 가능성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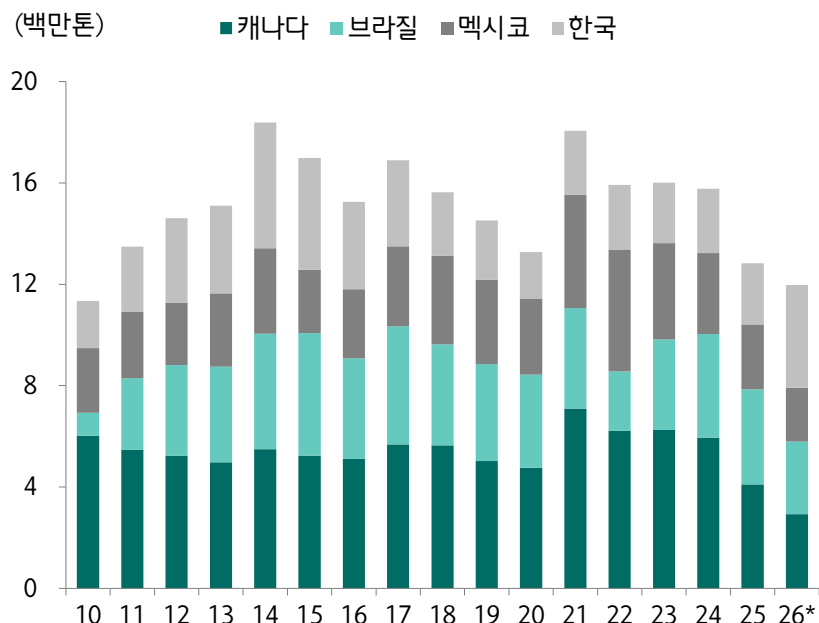
- 민주당 우세 시나리오를 감안하더라도 관세 및 통상은 행정부 권한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
- 트럼프 행정부 전세계 대상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에 대해 50%, 일부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15~25% 관세 부과 중
- 상기 품목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력구도가 바뀌더라도 큰 틀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
(의회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대통령 권한 제한하거나 232조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권 재의결 절차 필요)
(의회의 관세정책 견제로 일부 국가의 철강제품에 국한된 관세 정책 변경 cf. 쿼터제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미국 철강 수입 추이



자료: 미 통계국, 하나증권

미국의 상위 4개 국가별 철강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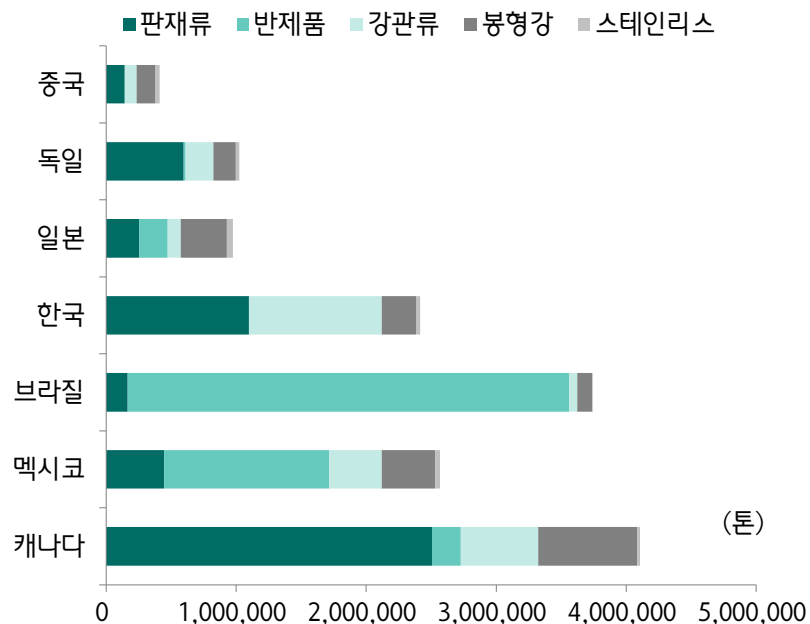


자료: 미 통계국, 하나증권

민주당 우세 시나리오: 미국내 데이터센터 화석연료 투자 축소, 한국의 미국향 수출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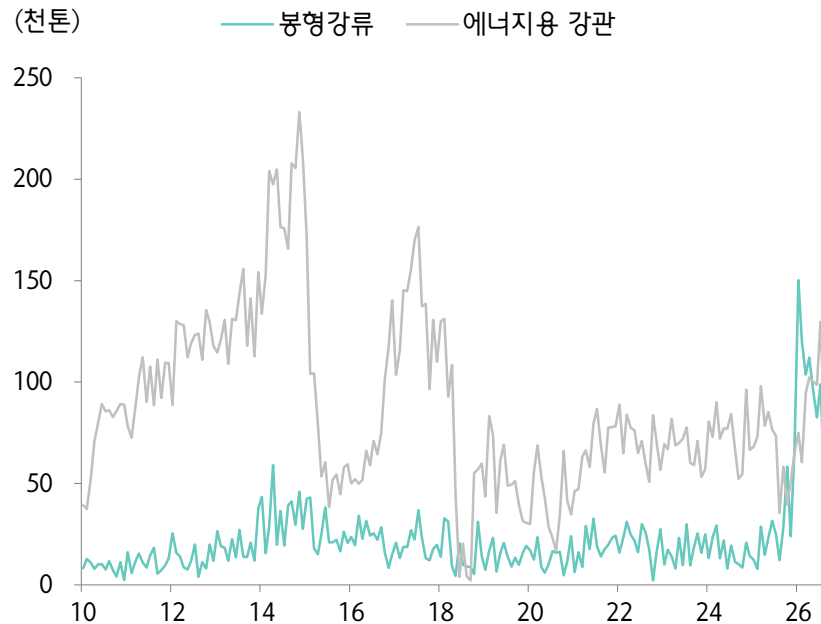
- 민주당 우세 시나리오라면 데이터센터 건설 주민 반대 반영 지역사회 영향 평가 강화되며 일부 프로젝트 지연 가능
- 화석연료 투자 축소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감독 강화로 일부 프로젝트 지연, 신규 프로젝트 환경규제 완화 견제
-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봉형강 및 에너지용 강관의 미국향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 가능

미국의 주요국 철강 제품별 수입 추이



자료: 미 통계국, 하나증권

한국의 봉형강 및 에너지용 강관 미국향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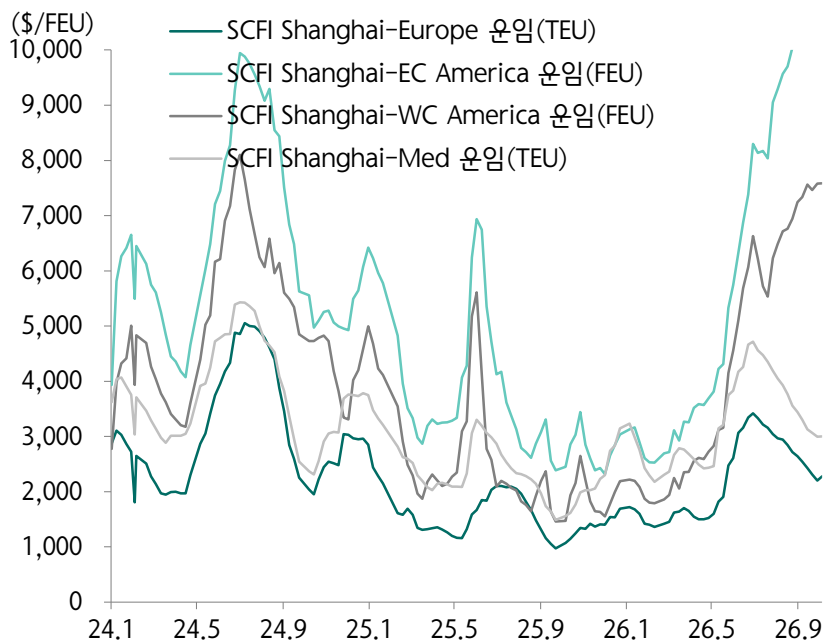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협회, 하나증권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트럼프 정부에서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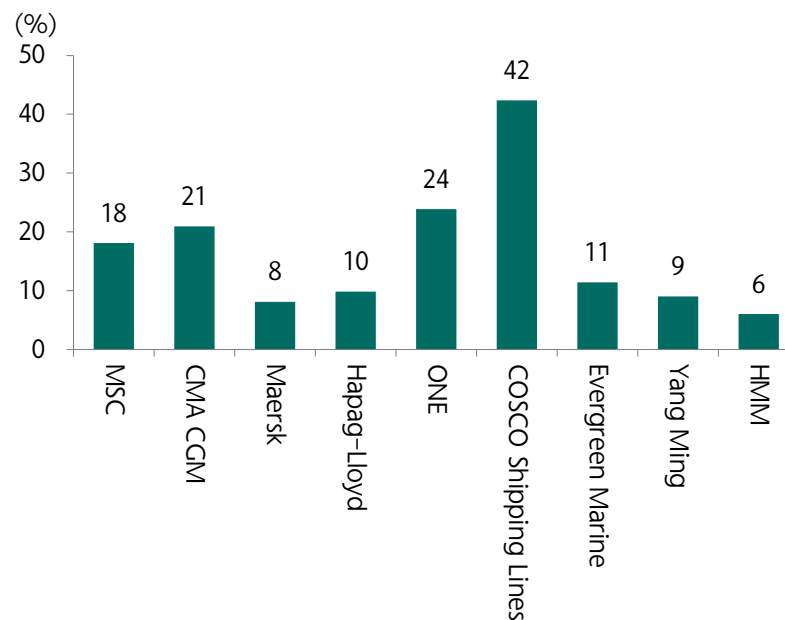
- 트럼프 취임 이후 해운 불확실성 확대: 1) 상호관세/대중관세 강화, 2) 입항수수료 부과, 3) 이란 전쟁
- 모든 불확실성 요인이 해운 운임 상승에 기여. 관세/입항수수료의 변동에 따라 미주 노선 물동량 변화, 전쟁 이후 해운 운임 상승
- 다만 민주당 승리 시에도 관세에 대한 결정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까지 관세 불확실성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입항수수료는 공화당/민주당 모두의 의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무관, 1년 연기된 중국 선박 입항수수료 면제 여부 주목 필요

SCFI 추이(항로별)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보유 선박 중 중국산 선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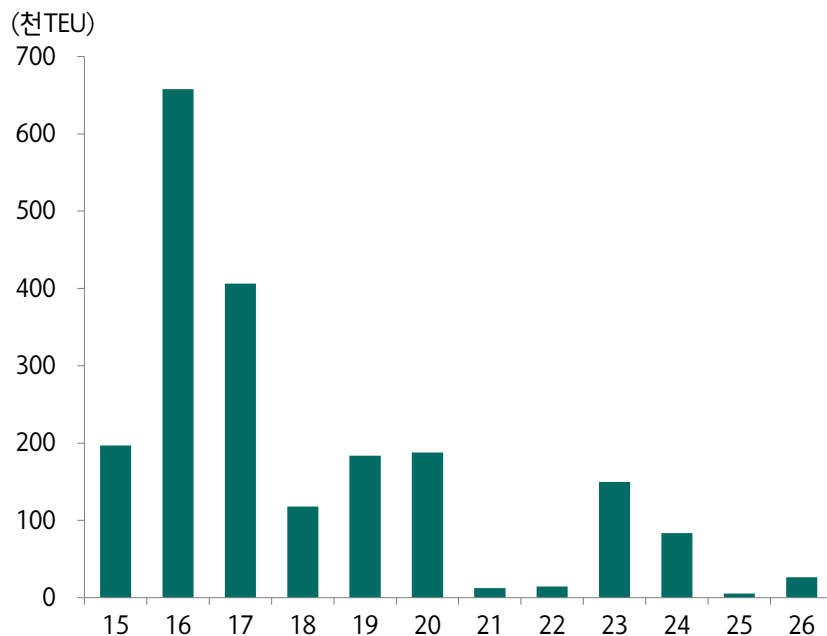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환경규제와 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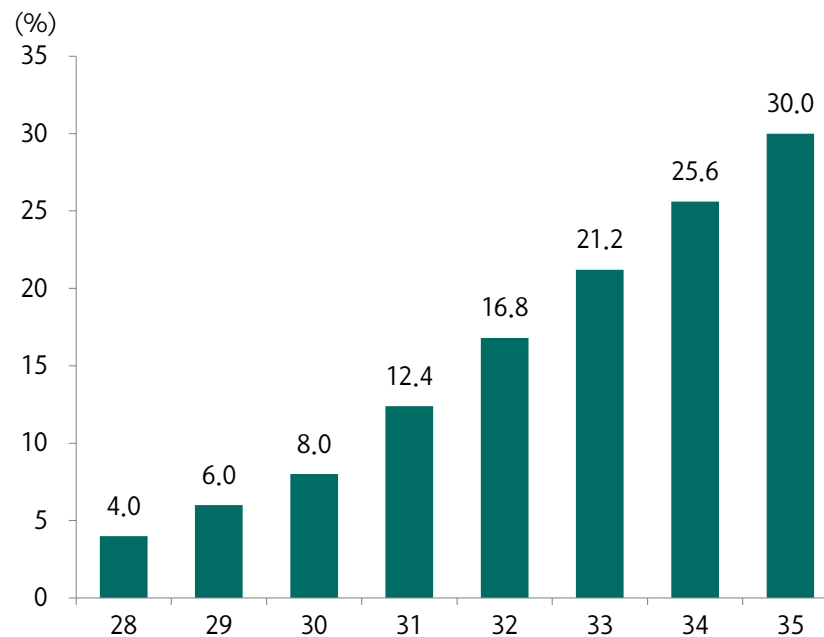
- 트럼프 정권에서 IMO 의 'Net Zero Framework' 채택 연기를 적극 주도, 당초 2025년 10월 정식 채택 후 2028년 시행 예정
- Net Zero Framework의 핵심은 온실가스 연료집약도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과
- 이로 인해 주요 선종의 폐선 속도가 늦어진 상황, 글로벌 선박 공급이 폐선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 민주당 집권 시 해운에 대한 환경 규제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 있음, 이로 인한 폐선이 증가한다면 해운업에게는 긍정적

글로벌 컨테이너선 폐선량 추이



자료: Clarkson, 하나증권

Net Zero Framework 연도별 GFI 기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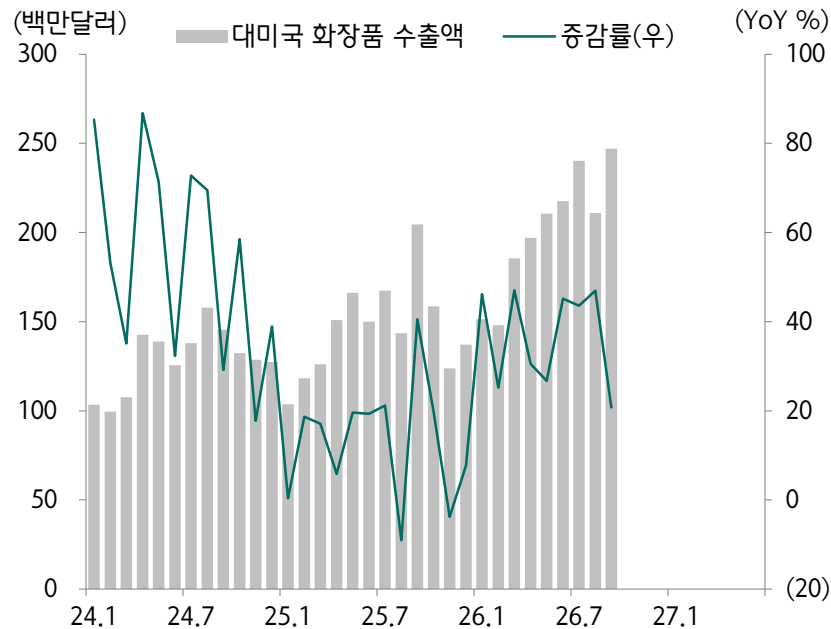


자료: IMO, 하나증권

관세/환율 영향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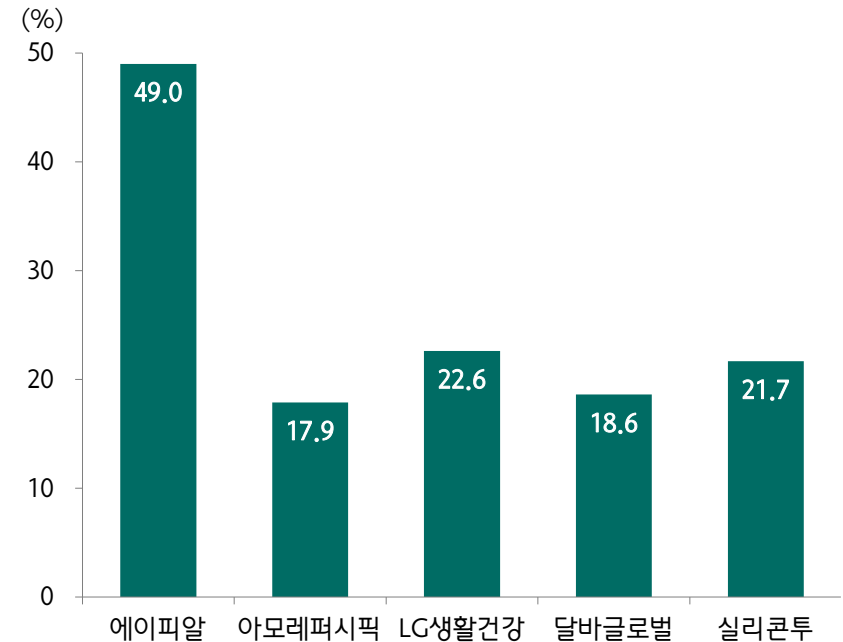
- 무역·관세는 대부분 대통령 권한에 속해있어 행정조치(executive action) 등을 통해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
따라서 현재 적용 중인 합산 12.5% 관세율 유지될 경우, 중간선거에 따른 화장품 업종 영향은 제한적
- Democratic Sweep 시 AI 규제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정권 교체 불확실성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종에 부담
- 회계기준 변경(IFRS 18호)과 맞물려, 대 미국 수출 비중 높은 화장품 업체 EPS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 미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2Q26 주요 화장품 기업 미국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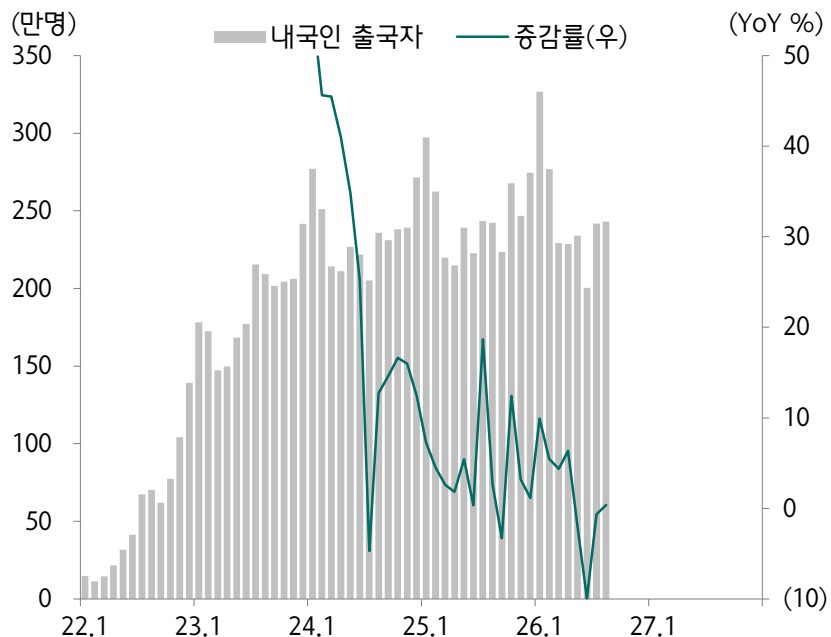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환율 하락, 백화점/면세점에 부담 요인

- Democratic Sweep 시 AI 규제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정권 교체 불확실성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백화점, 달러-원 환율 하락은 '외국인 인바운드 감소 + 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로 이어져, 백화점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
- 면세점, 지속적인 환율 하락은 원가율 상승(단기)에 따른 마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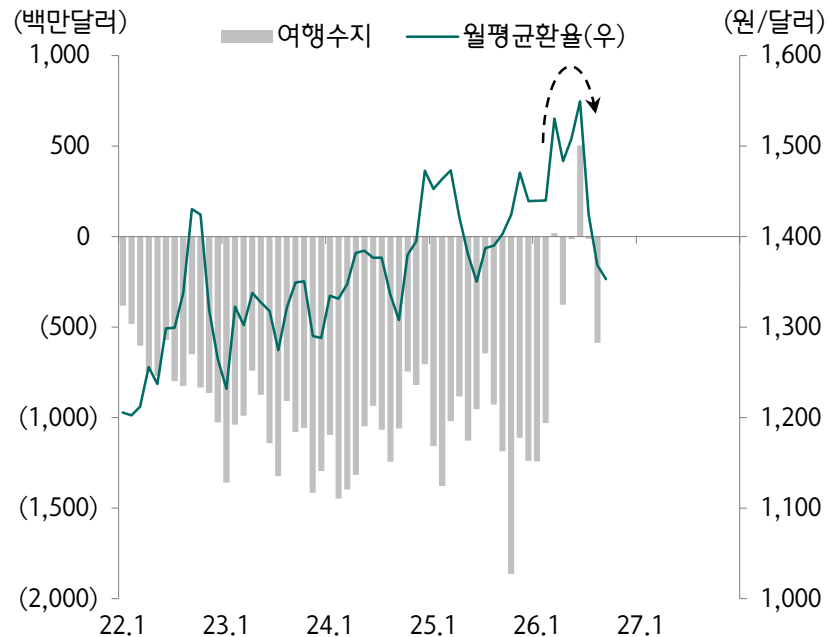
아울러 원화 강세는 내국인 아웃바운드에 긍정적이거나 외국인 인바운드 감소 가능성으로 매출 둔화 부담 증가

내국인 출국자 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나증권

여행수지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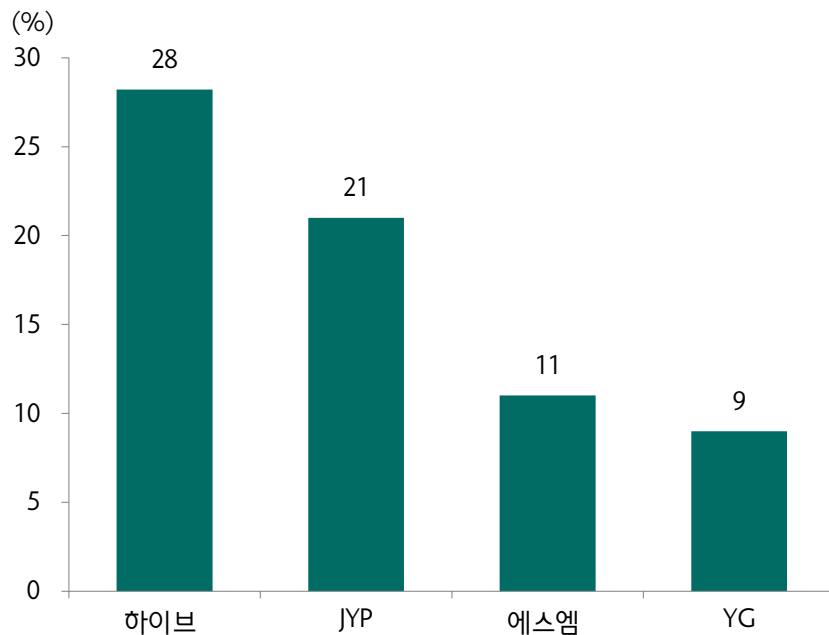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하나증권

달러 약세, 엔터는 영향 제한적·레저는 인바운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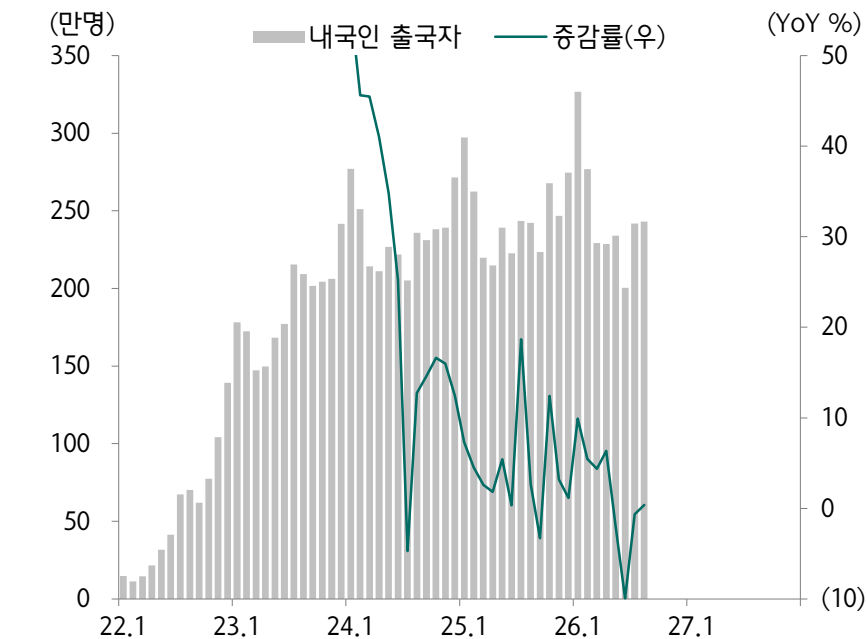
- 달러 약세는 수출 비중 높은 엔터 4사의 달러 매출 환산 손익에 부정적이나 영향은 제한적
- 아울러 엔화 약세 지속 시 기획사 일본 매출 원화 환산이익에도 부정적. 엔터 4사의 일본 매출 비중은 10~30% 내외
- 달러-원 환율 하락은 내국인 아웃바운드에는 긍정적이나, 외국인 인바운드 감소로 이어져 호텔/카지노 업종 실적에는 부담

2025년 엔터 4사 일본 매출 비중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내국인 출국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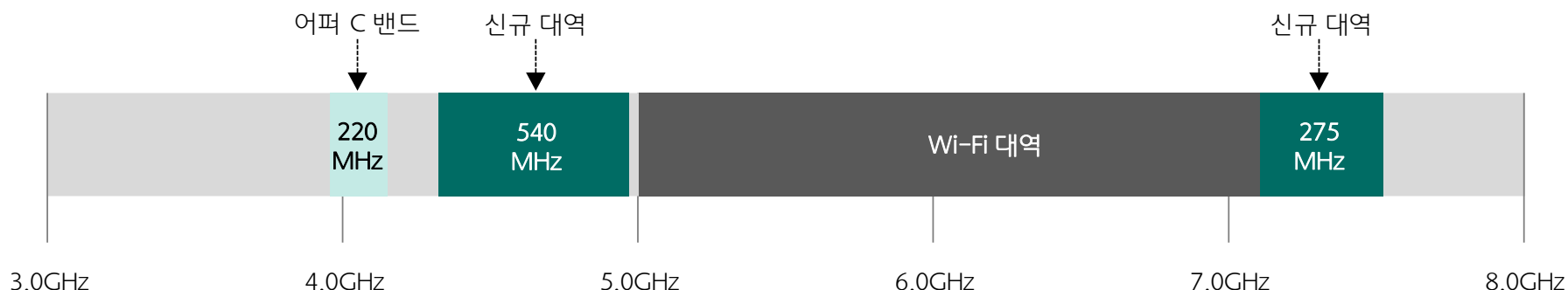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나증권

민주당이 다수당 되더라도 통신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

-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차지하더라도 OBBBA(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수정될 가능성 낮음. 이미 4월 어퍼 C 밴드 경매 일정을 비롯하여 세부 경매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민주당 역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
- OBBBA를 통해 2034년까지 FCC에 주파수 경매 권한 부여된 상황. FCC 위원장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공화당 우위의 위원 구성은 바뀌지 않을 것. 설령 법 수정이 시도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음
- 대중국 통신장비 규제 완화 가능성 희박. 트럼프 1기에 시작된 중국산 통신장비 규제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지속/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광모듈 제재를 골자로 한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입법안이 상원에 발의된 상황. 양당 모두 중국 제재에는 의견 일치

미국 경매용 주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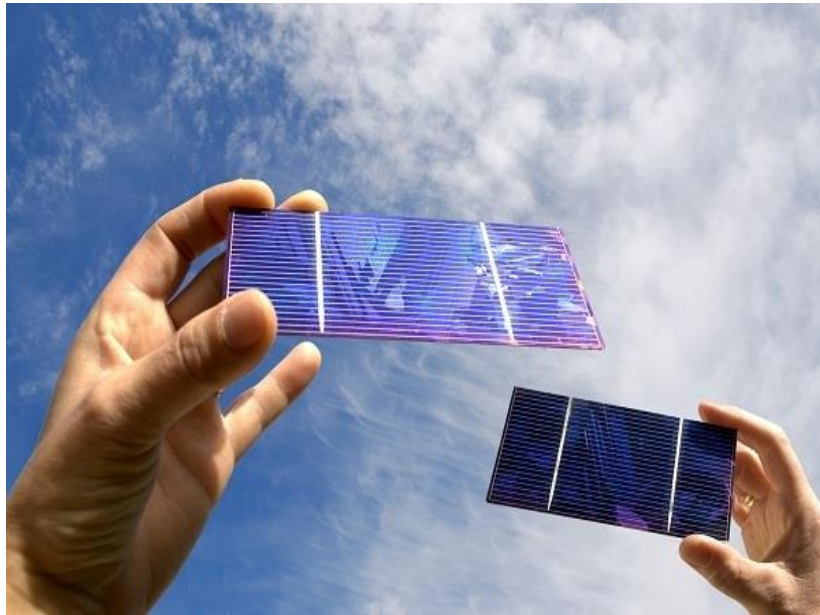


자료: NTIA, FCC, 하나증권

태양광용 페로브스카이트 산업 전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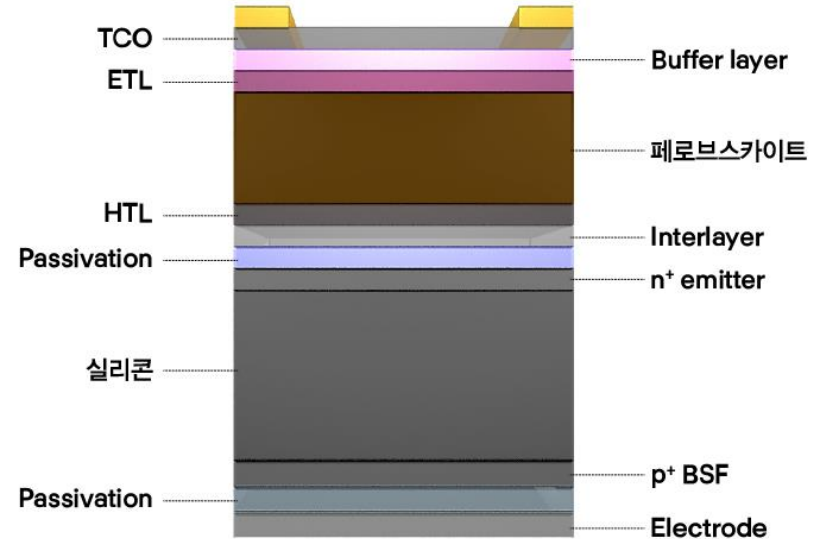
- 실리콘 단일접합 셀의 효율 개선 여지가 축소되면서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기술 부각
- 기존 실리콘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대규모 발전소 및 상업용 모듈로의 확장 가능
- 가볍고 반투명한 특성을 활용해 건물 외벽·창호·지붕 등 기존 실리콘 패널 설치가 어려운 공간으로 적용처 확대
- 저온 용액 공정 및 박막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휴대형 전원, 센서, 일부 모빌리티·전자기기용 발전 소재로 활용 범위 확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자료: 인더스트리뉴스, 하나증권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단면 구조



자료: Qcells, 하나증권

우주용 페로브스카이트 산업 전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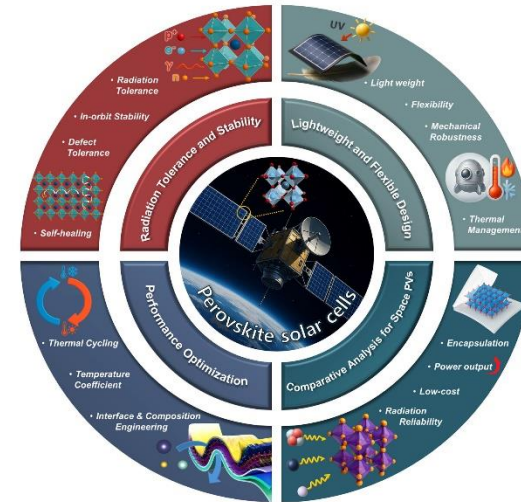
- 위성통신 및 지구관측 위성의 운용 확대에 따라 위성 전력 공급용 태양전지 수요 증가
- 페로브스카이트는 경량·고비출력·유연성을 통해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의 무게 및 비용 부담을 줄일 후보 기술
- 경량 박막 및 유연한 태양전지 구조는 소형 위성과 전개형 태양전지 어레이에 적용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전력 시스템, 고고도 무인 플랫폼 및 대형 전개 구조물 등으로 적용 가능성 확대

우주용 페로브스카이트



자료: I3P, 하나증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 기술 과제 및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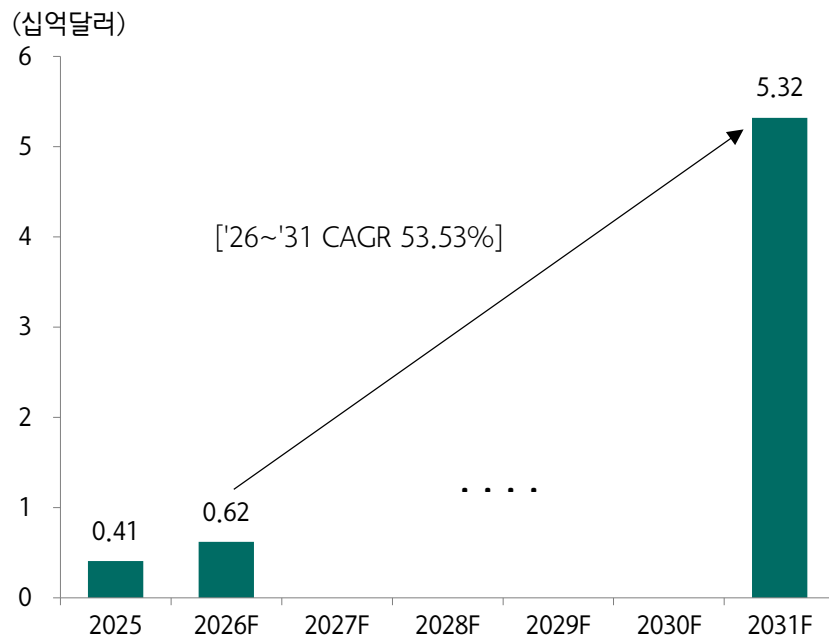


자료: OAE, 하나증권

우주&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산업 시장 규모 전망

- 글로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장은 2025년 4.1억 달러에서 2031년 53.2억 달러로 성장하며, 2026~2031년 CAGR 53.5% 전망
-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기술의 효율 향상과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상용화 초기 단계 진입, 유틸리티 발전 및 경량·유연형 모듈 중심의 시장 확대 기대
- 제품별로는 경질 모듈,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2025년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BIPV와 북미 시장이 향후 고성장 분야로 부상
- 유럽은 BIPV·유연 셀 기술개발 중심, 남미·중동·아프리카는 고일사량 기반 분산형 태양광 시장 잠재력 보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장 규모 전망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하나증권

지역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장 성장률 전망 (2026~2031년)

Perovskite Solar Cell Market CAGR (%), Growth Rate by Region, 2026 - 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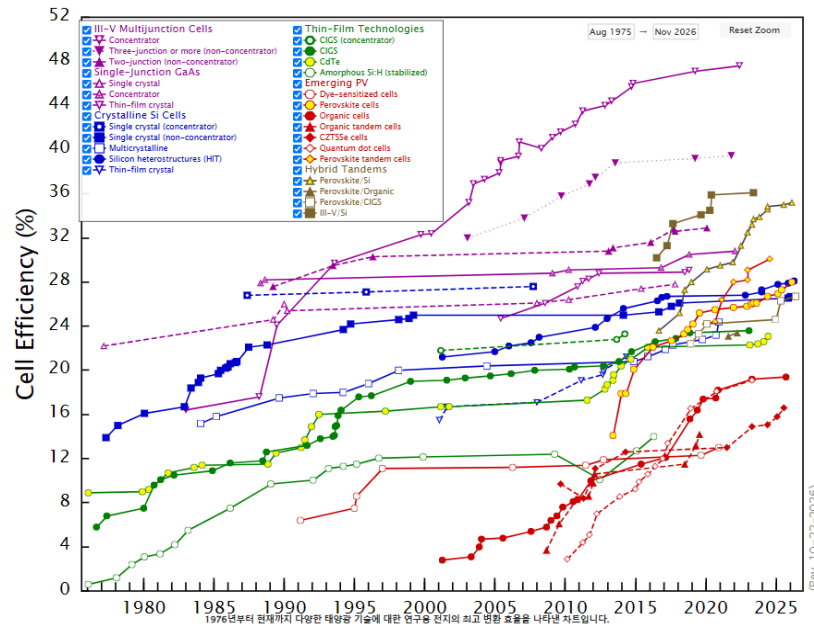


자료: OAE, 하나증권

우주&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주요 소재별 성능/비용 비교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10년대 이후 최고 효율이 빠르게 개선되며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로 부상
- 기존 실리콘 단일접합의 효율 한계에 근접하면서,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및 다중접합 기술을 통한 추가 효율 향상이 핵심 개발 방향으로 부각
-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는 고효율·신뢰성을 갖춘 III-V족 다중접합이 주류이나, 높은 제조비용과 낮은 비출력이 한계
- 페로브스카이트는 비출력 23 W/g, 유연성 및 저비용 제조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우주용 태양전지 후보로 부상

태양전지 소재별 최고 변환효율 추이



자료: National Laboratory of the Rockies, 하나증권

우주용 주요 태양전지 기술별 성능 및 기술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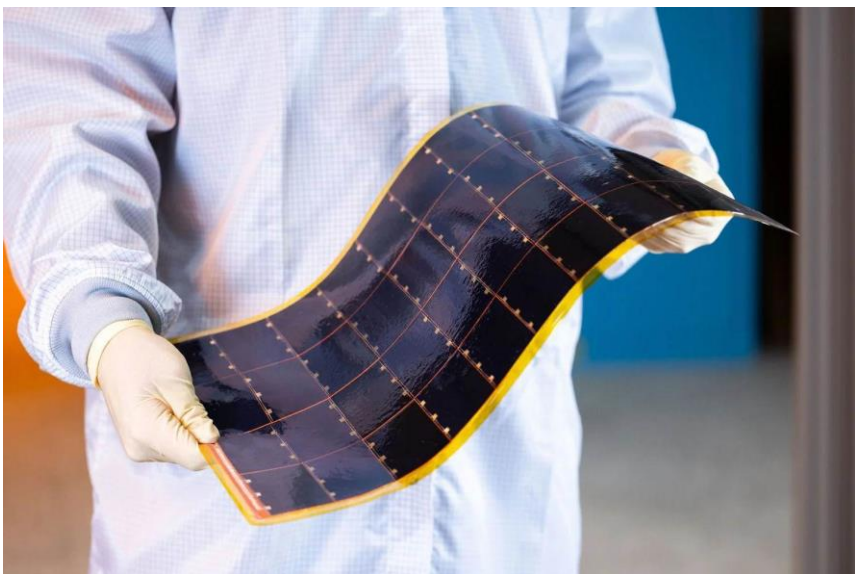
구분	다중접합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	CIGS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발전 효율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연구실 최고 효율	47.10%	26.10%	23.40%	25.50%
우주용 상용화 여부	최대 32% 수준	약 17%	상용화되지 않음	상용화되지 않음
방사선 내성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비출력 (W/g)	낮음~중간	낮음	중간	높음
비출력 수치	0.4~3.8	0.38	3	23
유연성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제조비용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자료: WILEY, 하나증권

우주·지상용 필름 및 소재: 경량·고내구성 소재 수요 확대

- 2026.08 미국 DOE 우주용 태양광 R&D 지원 발표: 최대 1,200만 달러를 투입해 우주용 태양전지의 성능·내구성 개선 및 제조 역량 확대 추진
- 우주용 태양전지는 발사 비용과 탑재 중량 제약으로 인해 경량·박막화가 중요하며, 극한 온도와 방사선 환경을 견디는 소재 기술이 요구됨
- 페로브스카이트 적용 확대 시 유연 기판, 폴리이미드 필름, 봉지·수분 차단 소재 등 관련 부품의 기술 개발 기회 확대 가능성

우주용 유연 태양전지 및 필름 소재



자료: Satcom, 하나증권

국내외 관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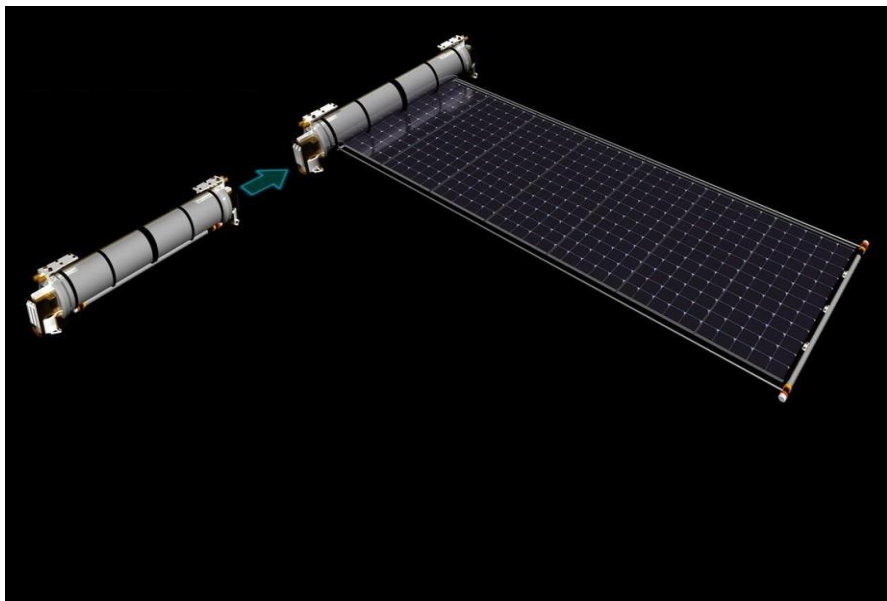
구분	기업	관련 사업
국내	아이컴포넌트	광학·기능성 필름 및 배리어 코팅
	PI첨단소재	폴리이미드 필름, 우주용 태양전지 소재 공동개발
해외	DuPont	Kapton 폴리이미드 필름 등 고기능성 소재
	3M	기능성 필름·접착 소재

자료: 하나증권

저궤도 위성·우주 태양광: 차세대 전력 공급망 형성

- 2026.08 미국 DOE 우주용 태양광 R&D 프로그램 발표: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파일럿 생산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우주용 태양광 제조 기반 강화 추진
- 저궤도 위성 및 우주 인프라 확장에 따라 제한된 탑재 공간과 중량 내에서 높은 출력을 확보하는 전력 시스템의 중요성 확대
- 페로브스카이트·CIGS 기반 유연 태양전지는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 대비 경량화 가능성이 있으나, 방사선 내성·장기 안정성·궤도 실증이 상용화의 핵심 과제

저궤도 위성용 전개형 태양광 패널



자료: 한화시스템, 하나증권

국내외 관련 기업

구분	기업	관련 사업
국내	한화시스템	위성·우주 시스템 및 방산 전자
	PI첨단소재	우주용 태양전지 폴리이미드 소재 공동개발
	플렉셀스페이스	페로브스카이트·CIGS 기반 우주용 태양전지
해외	Redwire(RDW)	우주용 태양전지 어레이 및 우주 인프라
	Rocket Lab(RKLB)	위성·우주 시스템 및 우주용 태양전지

자료: 하나증권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페로브스카이트 양산 공정 전환

- 2026년 페로브스카이트 양산 장비 개발 확대: 디스플레이 증착 기술을 태양전지 공정에 적용하려는 장비 업체들의 개발·사업화 움직임 가시화
- 페로브스카이트 제조에는 박막 증착, 정밀 코팅, 레이저 패터닝, 봉지 공정 등이 필요, 기존 OLED·반도체 장비 기술과 유사한 공정
- 상용화 과정에서 연구개발용 장비를 파일럿·양산 장비로 확대할 경우 장비 수요 증가 가능성. 다만 고객사 평가와 양산 수율 검증이 실제 수주 확대의 관건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증착·양산 장비



자료: Solarbe, 하나증권

국내외 관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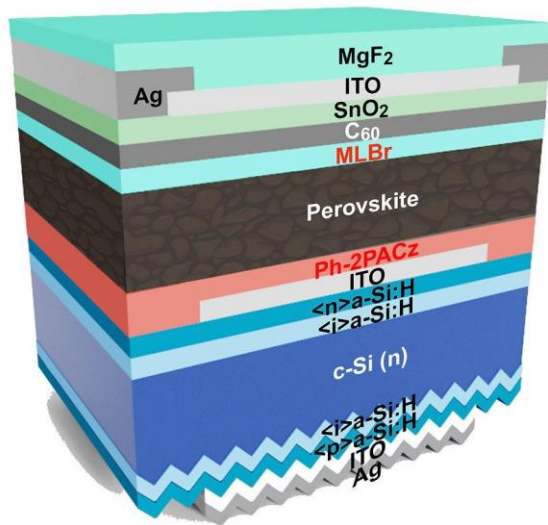
구분	기업	관련 사업
국내	선익시스템	태양전지용 PVD 증착 장비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기술
	필옵틱스	레이저 가공·패터닝 장비
해외	SC Solar	페로브스카이트·탠덤 태양전지 생산 장비
	Applied Materials (AMAT)	반도체·박막 제조 공정 장비

자료: 하나증권

페로브스카이트 라이선싱·IP: 특허 기반 사업화 확대

- 2025.04 Oxford PV-Trinasolar 특허 라이선스 계약: 중국 시장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특허 라이선스 체결
- 2026.02 Oxford PV-First Solar 특허 라이선스 계약: 미국 시장 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제조를 위한 특허 사용 권한 확보
- 특허 기반 사업은 직접 생산설비 투자 없이 기술이전·라이선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허의 유효성·권리 범위·실제 계약 및 기술료 수익화가 핵심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구조



자료: Solarbe, 하나증권

국내외 관련 기업

구분	기업	관련 사업
국내	LK캠	관련 소재 기술 및 사업화 연관성 확인 필요
	플렉셀스페이스 (비상장)	우주용 페로브스카이트·CIGS 태양전지 기술
해외	Oxford PV (비상장)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기술·특허 라이선싱
	First Solar	박막 태양전지 개발, Oxford PV 특허 라이선스
	Trinasolar	태양광 모듈 제조, Oxford PV 특허 라이선스

자료: 하나증권

미국 중간선거와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산업의 정책 모멘텀

-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 및 예산 변화가 차세대 태양전지 산업의 주요 변수로 부상
- 지상 태양광 세제 혜택 변화와 별개로, 우주·국방 분야에서는 경량·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확보 필요성 확대
- 미국 DOE의 우주용 태양광 R&D 지원과 제조 역량 강화 움직임은 소재·우주 공급망·양산 장비의 사업 기회로 연결 가능
- 국내 기업은 필름·소재, 우주 전력 시스템, 증착·패터닝 장비, 원천기술·IP 등 밸류체인별 기술 연관성을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 필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밸류체인별 투자 기회

산업	핵심 투자 논리	국내 수혜 후보
우주·지상용 필름 및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8 미국 DOE 우주용 태양광 R&D 프로그램 발표: 1,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통해 우주용 태양전지의 성능·내구성 개선 및 제조 역량 확대 추진 	아이컴포넌트(059100.KQ), PI첨단소재(178920.KS)
저궤도 위성·우주 태양광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6 미국 DOE 우주용 태양광 워크숍 개최: 2035년까지의 기술 개발 목표로 우주용 태양전지 성능 개선 및 제조 역량 강화 제안 • 위성 전력 시스템의 고효율·경량화와 우주 환경 검증 수요 확대 가능성 	PI첨단소재(178920.KS), 한화시스템(272210.KS)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공정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9 미국 DOE 박막 태양전지 지원 프로그램 발표: 4,400만 달러 규모의 R&D·실증 지원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및 미국 내 제조 기반 강화 추진 • 대면적 증착·레이저 패터닝 등 양산 장비 기술의 적용 가능성 부각 	선익시스템(171090.KQ), 주성엔지니어링(036930.KQ), 필옵틱스(161580.KQ)
페로브스카이트 라이선싱·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8 미국 DOE 우주용 태양광 R&D 프로그램 발표: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기술 확보와 상용화 검증이 주요 과제로 부각 • 원천소재·공정특허의 기술이전 및 해외 라이선스 사업화 기회 주목 	LK켄(489500.KQ)

자료: 하나증권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시 후공정에 간접 부담

- 민주당 우세는 의회 구도 변화. 현 행정부의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원 기조가 자동 전환되는 구조는 아님
- 전력·용수·공시 기준 강화는 정책 제안 단계. 입법·집행으로 구체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 비용 부담 가능
- 데이터센터 가동 지연이 GPU·HBM 주문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후공정 증설의 발주 시점 일정 조정 가능
- 선거 결과만으로 후공정 증설 지연을 기본 전망에 반영할 근거 부족. 실제 주문·발주 변경 여부가 판단 기준

데이터센터 정책: 비용 부담의 강도와 방식

구분	확인된 정책·제안
현 정부 20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인허가 신속화 추진 • AI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건설 지원
공화당 Husted 상원의원 법안 20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전력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주정부에 검토하는 법안 추진 • 하원 통과 후 상원 절차에서 제동
민주당 Warner 상원의원 제안 20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용수·공시 기준 강화 제안 • 기존 충족과 세제 혜택 연계 검토

자료: 백악관, Husted-Warner, 하나증권
주: 의원별 제안 기준. 정책 효과는 후속 입법·집행에 따라 변동

후공정 투자 지연 판단에 필요한 조건

단계	추가로 확인할 조건
데이터센터 건설·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전력·용수 확보와 비용 분담 검토 • 사업 일정 변경 시 서버 반입 시점 조정
GPU·HBM 추가 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서버 도입 지연 시 주문·납품 조정 가능 • 기존 수요 및 제품 전환과 구분해 평가
후공정 신규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설 장비의 발주·반입 시점 변동 • 국내 소부장 수주·매출 인식에 간접 영향

자료: 하나증권

미국 패키징 생산기반 확충 지속 전망

- 미국 내 패키징·테스트 생산기반 확대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 방향
- 제조 인센티브 집행과 기업별 투자가 뒷받침하는 현지화 기조 지속 전망
- 민주당 우세 시 CHIPS 집행·공동 R&D 감독 강화 가능. 보조금 복원·증액을 기본 전제로 보기 어려움
- 미국 중설과 글로벌 수요 증가는 구분. 국내 소부장 수주는 공급망 진입과 실제 장비 발주가 전제

제조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의 현황

구분	확인된 지원 현황
제조시설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O: 제조 인센티브 집행 지속 • GF의 기존 CHIPS 지원을 인터포저 등에 재배분
공동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O: 기존 연구개발 지원 취소·보류 • 첨단패키징 프로그램의 이행계획 마련 권고
기업별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ST: 7개 기업과 8.74억달러 지원 의향서 • 첨단패키징·기판·메모리 등 포함 최종 심사·승인 전 단계

자료: GAO(미국 회계감사원), NIST(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하나증권

미국 첨단패키징 공급망의 투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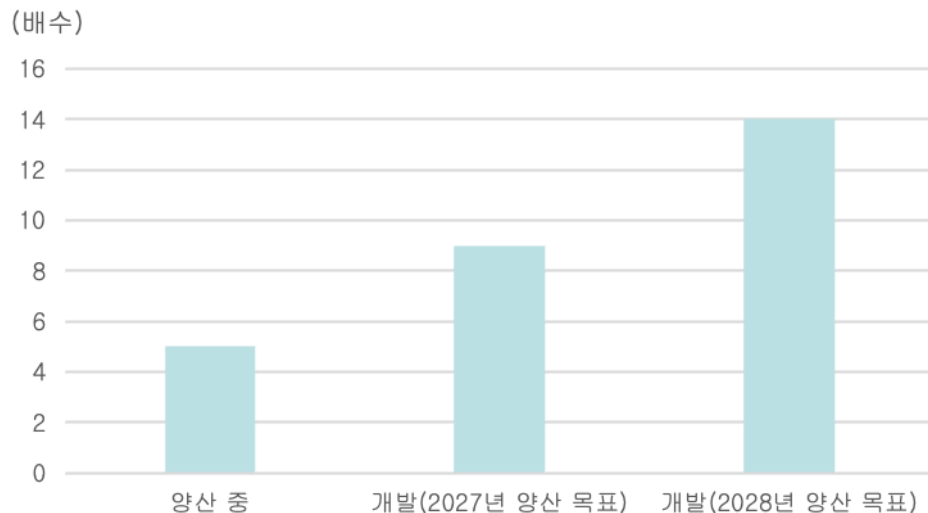
프로젝트	주요 일정·내용
SK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10 클린룸 완공, 2029년 하반기 양산 계획 • 한국산 웨이퍼의 미국 내 패키징·테스트
Amkor-NVIDIA 미국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억달러 규모 다년간 패키징·개발 계약 • 미국 첨단패키징 생산능력 확대 지원
GlobalFoundries 인터포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CHIPS 지원 최대 9.55억달러 재배분 • 인터포저·포토닉스·SiGe 생산기반 확충

자료: SK하이닉스, Amkor, NIST, 하나증권

HBM·CoWoS 고도화로 본딩·검사·테스트 요구 확대

- TSMC는 5.5배 CoWoS 생산 중. 9.5배는 2027년 양산, 14배는 2028년 생산 목표
- 14배 패키지는 대형 연산 다이 약 10개와 HBM 20스택 집적 목표. 2029년에는 14배 초과로 확대 계획
- 집적 규모 확대와 HBM 고단화는 정렬·접합, 힘·결함 관리, 적층 전후 테스트의 중요도를 높이는 요인
- 공정 고도화 필요성은 선거 결과와 별개. 장비 투자 규모·시점은 최종 수요와 양산 전환 일정에 따라 변동 점검은 필요

TSMC CoWoS 대형화 로드맵(레티클 면적)



자료: TSMC, 하나증권

집적 규모 확대에 따른 공정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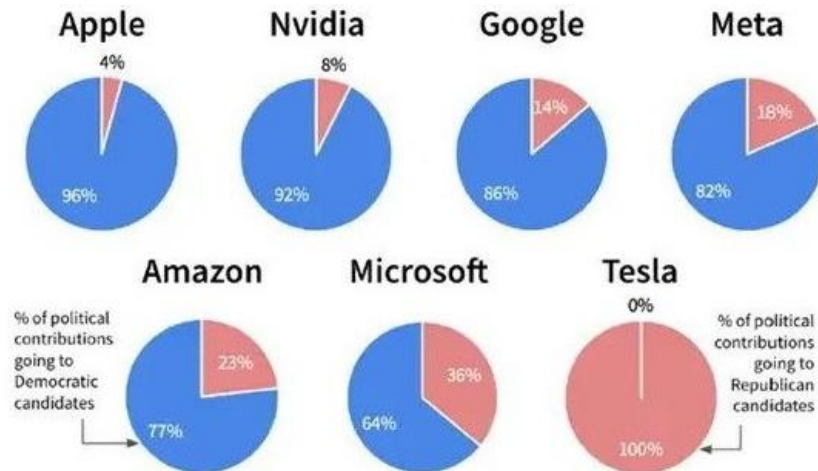
공정	기술적 요구
본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BM 고단화·박형화에 따른 정렬·접합 정밀도 • 접합 수율을 위한 표면 균일도·힘 관리
검사·계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 범프 높이·배선 형상 계측 • 힘과 접합 결함을 관리하는 공정 제어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층 전 양품 다이 선별 • 적층 후 전기적 기능 검증으로 불량 비용 관리

자료: 하나증권

미 민주당 vs. 공화당 누가 더 Physical AI를 잘 키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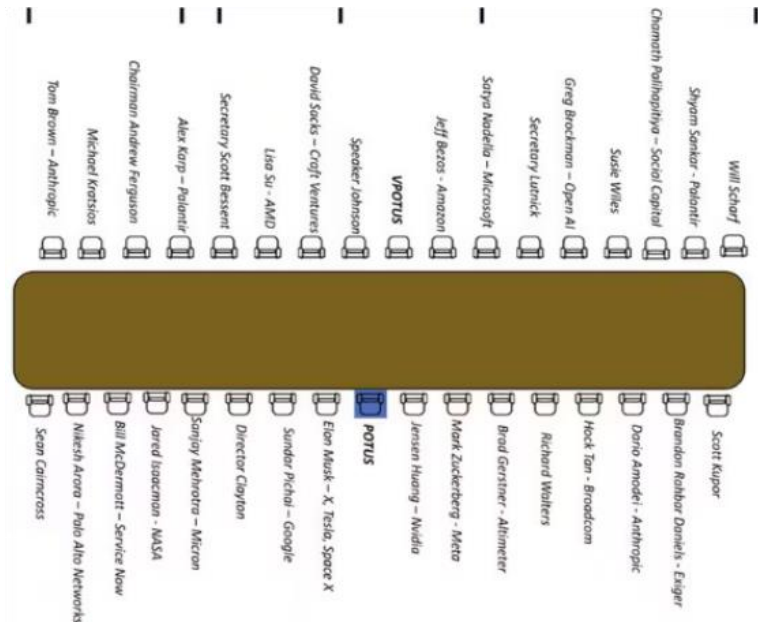
-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해와. 그러나 트럼프 2기 빅테크는 AI 자율규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상황
-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Physical A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인권/저작권/데이터 Privacy 관련 새로운 기준에 맞춰 Physical AI 개발 진행될 것(민주당/공화당 Physical AI 정책 공통분모는 중국에 맞서 미국산 기술 보호 및 개선)
-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Physical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명확한 규제를 정립 후 개발 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자율규제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저항이 커지면서 나타난 bottleneck 문제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규제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음

24년 대선 당시 빅테크 정치 후원금 비중



자료: IFR, 하나증권

26년 9월 29일, 백악관 오찬 자리 배치도(신규 규제 보단 자율규제 약속)



자료: White House, 하나증권

Tesla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미국 혁신 기업

- 오바마 민주당 정부 시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로 Tesla가 크게 성장. 이런 흐름이 바이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 노조를 편애한다고 생각해, 첨단산업(우주/로봇/자율주행) 분야 성장 기대하며 트럼프 정권과 손잡아
- 궁극의 Physical AI는 휴머노이드 로봇틱스이며, 민주당은 인간과 경쟁하는 휴머노이드를 정책적으로 지지해줄 가능성이 없음
- 따라서 Tesla는 다소 이상적인 ‘Abundance for All’ 사회 속 사람 돕는 Physical AI 기업으로 포지셔닝
-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Tesla를 포함한 AI기업들이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는 점
- AI Safety/신규 경쟁사 견제/재정난으로 신규 모델 개발 연기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규제에 대비한다는 것

프리몬트 파일럿 생산라인의 옵티머스 손·팔 조립 공정



자료: Tesla, 하나증권

한눈에 보는 옵티머스 3 생산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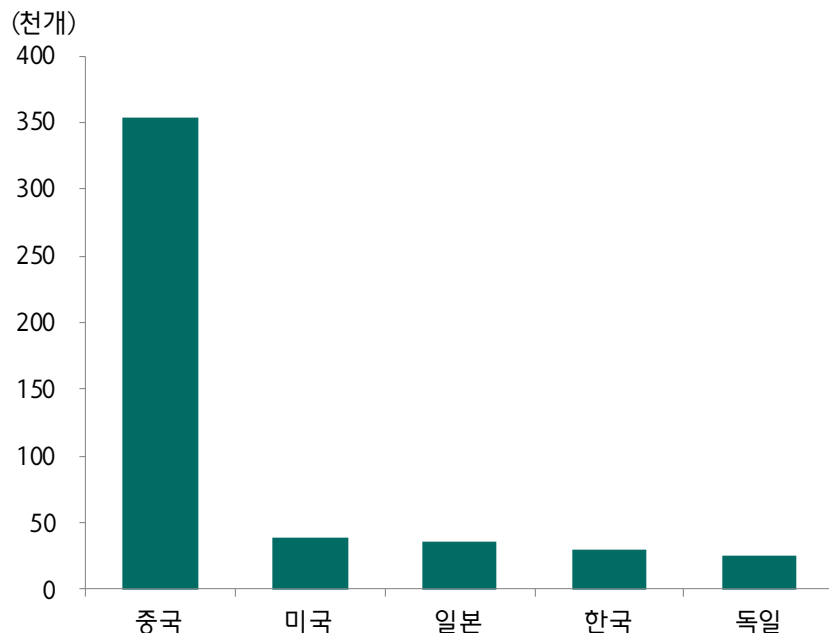
주요 이정표	일정·생산능력	세부 내용
옵티머스 3 생산 개시	2026년 여름	프리몬트 공장에서 초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옵티머스 3 양산	2027년 여름	손 생산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
옵티머스 4 설계 완료	2027년	매년 새로운 로봇을 선보이는 연간 개선 주기 구축
프리몬트 생산능력	연간 100만대	제조 공정 검증을 위한 거점
기가 텍사스 생산능력	연간 1,000만대	옵티머스 4 및 후속 모델의 글로벌 대량생산 핵심 거점

자료: TESERY, 하나증권

민주당: 미국 첨단로봇 보호에 동의

- 중국은 산업용 로봇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 미국 내에 초당적 중국 Physical AI 견제 흐름이 견지됨(26.03 국토부 하원 청문회)
- 특히 중국이 대만 공격 뿐만 아니라 미국 대비 비대칭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민주당도 기술 패권 유지 관점에서 미 로봇 산업 보호에 동의
-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26년 3월 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 6월 Make More in America Act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 전략자산과 첨단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2025년 주요 시장의 산업용 로봇 설치 추이



자료: IFR, 하나증권

CIA, 중국의 비대칭 전략 강화 전망

China-Taiwan

In 2026, Beijing probably will continue seeking to set the conditions for eventual unification with Taiwan short of conflict. China, despite its threat to use force to compel unification if necessary and to counter what it sees as a U.S. attempt to use Taiwan to undermine China's rise, prefers to achieve unification without the use of force, if possibl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also continues to develop military plans and capabilities for attempting to achieve unification using military force if directed to do so.

The PLA probably is making steady but uneven progress on capabilities that it would use in any attempt to seize Taiwan and deter—and, if necessary, defeat—U.S. military intervention. At times, it has increased the scope, size, and pace of operations around Taiwan.

- The IC assesses that Chinese leaders do not currently plan to execute an invasion of Taiwan in 2027, nor do they have a fixed timeline for achieving unification. However, China publicly insists that unification with Taiwan is required to achieve its goal of “national rejuvenation” by 2049—the 100th year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Beijing almost certainly will consider a variety of factors in deciding whether and how to pursue military approaches to unification, including PLA readiness, the actions and politics of Taiwan, and whether or not the U.S. will militarily intervene on Taiwan's behalf.
- Chinese officials recognize that an amphibious invasion of Taiwan would be extremely challenging and carry a high risk of failure, especially in the event of U.S. inter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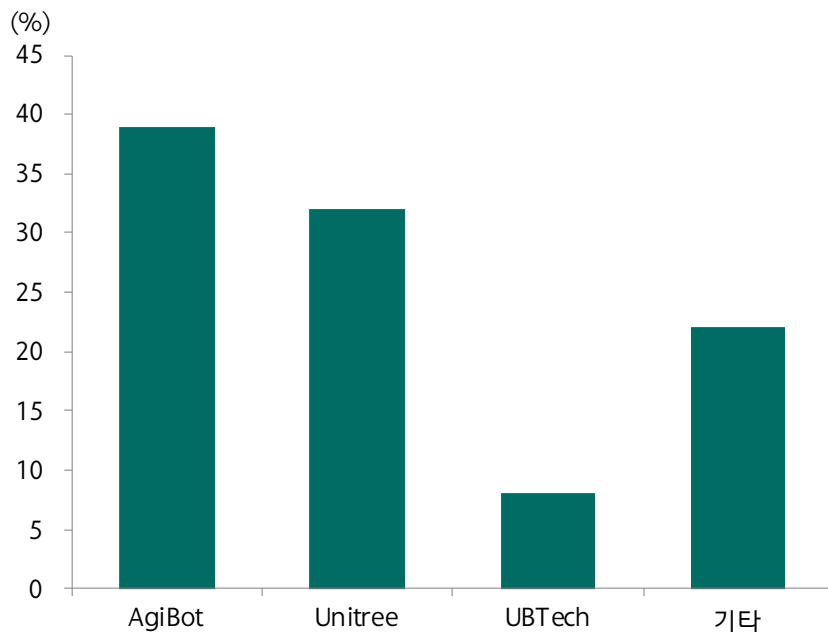
A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may disrupt U.S. access to trade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critical to the global economy. If the U.S. were to intervene, it probably would face significant but recoverable disruptions to its transportation sector from Chinese cyber attacks. Even without Washington's involvement, U.S. and glob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would face significant and costly consequences, with tech supply chains disrupted and investor fear across markets. In addition, a protracted war with the U.S. risks unprecedented economic costs to the U.S., Chinese, and global economies.

자료: CIA, 하나증권

민주당: 휴머노이드는 인류의 동반자 O, 경쟁자 X

- 민주당은 로봇을 AI산업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AI규제(Regulation & Safety) 등 개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대비 산업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
- FCC에서 해외산 로봇에 대한 전면 인증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판단. 민주당의 안전이란 중국산이 아니며, 미국 노동자를 해치지 않고, 인권(이민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AI가 발전해, AI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것
-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앞서 가더라도, 미국인 일자리/사회 안전망을 빼앗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

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 비중



자료: New Market Pitch, 하나증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 통신로봇을 수입금지 대상에 추가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Covered List," originally published in 2021, identifies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ervices that it says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n 28 July, the FCC added mobile, communicating robots weighing more than 2 kilograms and power inverters commonly used in solar panels to the list, meaning that new products from any foreign country in these categories are no longer eligible for import.

The move is a Department of Defense–driven expansion of scattered federal efforts to further limit U.S. exposure to potentially sensitive Chinese technology, but it may impose major changes on the robotics industry in allied countries, too.

The FCC's announcement says:

All foreign-produced advanced robotic device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U.S. persons...unless the [Department of Defense determines that] a given foreign-produced advanced robotic device, or a class of such devices, does not pose such risks.

자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하나증권

민주당: 기술은 인류를 돕는 것

- Physical AI 분야에서 현재 4족 보행 로봇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 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이민자 모니터링용 로보독을 도입/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민주당 승리 후 인권 침해로 Patrol 로봇틱스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Physical AI 모델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 분야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음. 콘텐츠 제작자 IP에 무게를 둔 정책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판단
- 분야별로는 재난대응/헬스케어/방산 로봇 분야가 강화되고, 휴머노이드/프론티어 모델 등의 성장 둔화를 예상

미국 빅테크 데이터 무단 수집에 대한 시위



자료: 언론사 발취, 하나증권

이민세관단속국, 4족 보행 분야 투자 계획

ICE plans to spend up to \$2 million on robot dogs for immigration raids

Mike Ingram

2 September 2026

자료: ICE, 하나증권

기타 업종 대응 전략

유틸리티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종료 기대감 약화 시 에너지 가격 높은 수준 유지 가능. 정부 출구전략 확인 시점이 시황 개선의 출발점 대미투자 협력 요청 강도 높아질 수 있음. 가스전, 원자력 프로젝트향 출자기업보다 기자재 공급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종료 예정인 풍력 세액공제 종료 시점 연장 시도 가능성.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실효성 확보 어려움
조선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투자(MASGA) 집행 요구 강화로 한국 조선소의 미국 현지 투자 증가. 해외 건조 허용은 민주당과 초당적 합의 필요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연료 규제 강화로 인한 북미 LNG 수출 프로젝트 지연 시 LNG선 수주 모멘텀 약화 가능성 존재
전기전자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부의 친 AI 및 인프라 확대 기조에 따라 규제 압박은 낮아질 전망.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향 패키징 기판, MLCC 등 IT 부품 업종 투심에는 긍정적 관세 및 대중국 정책은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센터 관련 규제 및 조사 압박 높아지며 프로젝트 승인 가능성. 데이터센터향 IT 부품 수요 또한 지연 수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급부족 더욱 심화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
스마트글라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 스마트글라스의 서비스 확대에 우호적 다만 보급 속도는 착용성·가격·활용도 개선이 핵심이며,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수요는 화면 탑재 모델의 확산에 연동 업종 대응은 디스플레이 탑재 비중과 양산 확대를 중심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 비용과 제품별 출시 일정 병행 점검 필요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영향력 확대 시 얼굴인식·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감독 논의 강화 가능성 동의 절차·데이터 처리 요건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면 일부 기능 도입과 출시 일정에 부담 업종 비중은 유지하되, 기능 제한이 화면 탑재 모델의 출하 계획에 반영될 경우 수요 전망 조정 필요
IT부품 (스마트폰 카메라)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 압박과 공급망 재편 부담 지속을 가점. 관세의 완제품 가격 전가 시 스마트폰 교체 수요에 부담이며, 생산거점 조정은 부품 공급망의 비용 증가 요인 OIS·폴디드줌 등 고사양 부품의 채택 확대와 가동률 개선에 초점을 둔 업종 대응 필요. 출하 회복 없이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범용 부품은 보수적 접근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견제 강화가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완화로 이어질 경우 소비심리와 교체 수요에 우호적. 다만 기존 관세의 즉각 철회를 전제하기는 어려움 부담 완화가 실제 완제품 가격과 출하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주목. 정책 변화 전까지는 고사양 카메라 채택에 따른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 중심 대응
건설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 등 전통에너지 지원 정책 지속. 원전에 대한 모멘텀 투자 유지. 특히 대형원전 및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현대건설에 대한 비중 확대 추천 11월 중간선거 이전 모멘텀 약화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V자 반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음 대미투자에 대한 협력 강화. 원전에 이어 알래스카 등 LNG 투자 확대. LNG 관련 종목인 대우건설, 삼성E&A도 수혜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강화 시 원전에 대한 모멘텀 약화. 데이터센터 정책 반대 강화 시 SMR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 반면 대형원전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우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의견 강화 시,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수요 증가 이에 따른 국내 데이터센터 임차 수요 기대감 충족, 국내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GS건설 등)이 수혜
인터넷/게임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 없음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미국 내 AI DC 규제, 감독 강화로 미국 외 지역 프로젝트 증가 가능. 국내 AI DC 기업 수혜

기타 업종 대응 전략

은행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는 미국 대형은행에 호재로 작용해 왔는데 공화당 승리시 현 기조 유지 가능성 높음 국내 은행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미국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금리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 가능 다만 현 수준에서 시중금리가 계속 추가 상승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음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감세나 관세 수입 트럼프 배당금 등의 추가 재정확대 입법이 어려워져 금리 상승 압력 일부 완화 가능 만약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경우 은행 NIM 추가 개선 여지는 제한적이지만 달러 강세 기대가 누그러질 수 있어 원/달러 환율 추가 하향안정화 예상 이 경우 CET 1 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주주환원 여력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음
증권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적자 확대와 관세 정책 지속에 따른 미국 장기금리 및 달러 강세는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 국내 증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외국인 수급 둔화로 인한 국내 증시 부진이 이어질 경우 국내 증권사의 BK 및 Trading 영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 압력 완화될 가능성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권업종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 다만 예산 및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은 단기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보험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보험업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재정적자 확대와 관세 정책 지속에 따른 미국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으나, 최근 보험사들의 ALM 관리 강화로 금리 변동이 K-ICS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대비 축소됐음 다만 금리 상승 시 보유 채권 및 수익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단기 투자손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회사별 FVPL 자산 비중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손익 차별화될 전망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보험업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미국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최근 보험사들의 ALM 관리 강화로 금리 변동이 K-ICS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대비 제한적 다만 최근 금리 상승 과정에서 발생했던 유가증권 관련 평가손실 부담이 완화되면서 단기 투자손익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음
제약/바이오	공화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232조로 한국산 15% 상한 합의됨. 정책이 유지되어도 국내 주요 산업인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약품 등은 무관세로 공화당 집권 전과 동일 특허 독점권이 남은 신약은 15%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미국 내 대부분의 빅파마가 정부와 무관세 합의(온쇼어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한 상태이고 국내 기업은 그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향이 없음(ex. 유한양행) 저분자 화합물 신약의 원료 생산 원가는 5%대로 매우 낮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도 0.75% 상승에 불과함
	민주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관련하여, 공화당 승리로 얻는 영향이 거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이익 차이는 없음 메디케어 약가협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빅파마 오리지널이 그 대상이라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은 매우 제한적이고,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변경된 후에도 메디케어 약가협상 기조가 완화되지 않았음. 따라서 현재와 큰 차이 없을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